

## 동북아시아의 갈등의 기류

아시아 보고서 N°108 – 2005년 12월 15일

# 목차

내용요약과 정책 권고 .....	i
<b>I. 서론 .....</b>	<b>1</b>
<b>II. 영토 분쟁 .....</b>	<b>3</b>
A. 독도/다케시마 .....	4
B. 센카쿠/다오위 .....	7
C. ....	8
<b>III. 역사 분쟁 .....</b>	<b>12</b>
A. 전쟁 범죄 .....	12
B. 미국의 역할 .....	13
C. 야스쿠니 신사참배 .....	15
D. 역사교과서 .....	18
E. 역사의 충돌: 한중일 역사 박물관 비교 .....	21
1. 일본 .....	21
2. 한국 .....	22
3. 중국 .....	23
<b>IV. 일본의 과거사 사죄 문제 .....</b>	<b>25</b>
<b>V. 부상하는 민족주의 .....</b>	<b>29</b>
A. 중국 .....	29
B. 한국 .....	30
C. 일본 .....	32
<b>VI. 해결책 .....</b>	<b>37</b>
A. 영토 분쟁 .....	37
B. 역사 분쟁 .....	38
C. 신뢰구축 조치 .....	39
D. 제도 구축 .....	40
<b>부록</b>	
A. 동북아시아 지도 .....	43

## 내용 요약과 정책 권고

동북아시아에서 세력관계의 이동은 한국, 중국, 일본의 민족주의고양을 자극하고 있고 이는 영토와 과거사문제를 둘러싼 국가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실패하면 긴장은 고조되고 동북아에 내재되어있는 안보적, 경제적도전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도 위협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중일 세 나라는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련의 실용적인 신뢰구축과 제도구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성장과 한국의 세대교체, 그리고 일본 경제력의 쇠퇴는 때때로 폭력으로까지 나타나는 외국인 혐오증을 불러왔다. 이들 세 나라는 안보, 핵비확산, 에너지, 환경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가장 통합력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공통의 정치적, 안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구가 없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2005년에 발생한 몇몇 사건들은 폭발직전에 있는 긴장상태를 잘 보여준다. 3월에 한국 시위대의 몇사람들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손가락을 잘랐다. 그 다음달에 중국의 시위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일본 기업체와 영사관을 공격하기도 했다. 6월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현안을 논의하 기보다 역사문제를 논하는데 2 시간 가량의 정상 회담시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9월 들어 동지나해의 영유권타툼지역에서 일본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석유시추를 개시했다. 또한 고이즈미 총리가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자 후진타오 주석은 11월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 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영토 분쟁의 경우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섬들은 대개 무인도이거나 수면아래에 있는 바위 들인 경우도 있는데 국제법적으로도 모호한 상태이다. 주요 분쟁지역은 한일간의 독도/다케시마, 중국-일본- 대만 사이의 센카쿠/다오위, 러일간의 쿠릴 북방 4 개 섬 등이다. 이들 섬의 중요성은 섬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섬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수역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영토 문제를 제껴두고 공동 탐사 및 천연자원의 적절한 보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분쟁지역은 아니지만 미래에 불거질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중국의 동북지역(한국명 간도, 중국명 지앤다오)가 바로 그것이다. 이 지역은 조선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한국의 일부 단체들은 역사를 근거로 한반도가 통일될 때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먼데, 중국의 조선족은 통일 코리아에 편입되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고 한국은 한반도의 점진적인 통일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간도 영유권에 대한 요구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우익집단의 역사교과서수정 움직임은 한국과 중국의 경악을 초래했고 일본이 2차 대전을 참회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을 비판해온 한중 양국의 감정을 악화시켰다.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한중 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지만 일본은 독일과 달리 개인 희생자들에게 직접 보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역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모습은 국방력을 강화시키면서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의구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과 국제평화유지작전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은 헌법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개정의 방향은 1945년 패전이후 부과된 일본의 군사행동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적대적인 반응은 일본의 반발을 야기해 우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와 맥락은 다르지만 일본의 역사문제도 심각한 주제이다. 리더십의 교체와 대미관계의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배청산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내에서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이슈이다. 중국에서 역사문제는 항일투쟁에 대한 기억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이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공산주의 이념을 자신의 정치질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감정적이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무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데 동북아문제는 해결가능하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각국의 연구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상호협력이 바로 그것이다. 유망하고 전향적인 조치들 가운데에는 행동규약도 포함되는데 일례로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규약은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근해자원 공동관리를 위한 합의들, 에너지와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제도들, 상호군사교류 증대, 국가의 영광이나 수치가 아닌 전쟁희생자의 보편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춘 역사박물관들이 있다.

수십년간 쌓여왔던 영토와 역사분쟁을 확실히 해결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조속히 이뤄지기도 힘들다.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정부에 대한 권고

1. 여론의 악화와 관계없이 모든 수준의 정부 관리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역사문제를 외교와 분리시킬 것.
2. 분쟁지역에서 일방적인 군사훈련을 자제할 것.
3. 군사교류 및 합동훈련, 그리고 신뢰구축 조치를 증대시킬 것.
4. 사용후 핵연료의 보관소 설치와 같은 문제들을 탐색하는데 협력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역지구를 설치할 것.
5. 재난구조와 환경보호를 위한 지역협력 기재를 창설할 것.
6. 지속적인 트랙-2 대화기구로 동아시아 평화연구소를 창설해 공동조사, 연구, 회의를 개최할 것.
7. 민족주의보다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과 성과를 전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목표하에

역사물전시의 합의된 기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박물관 관장과 학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

- 8. 지역대화를 촉진하는 NGO의 활동을 지원할 것.

**일본 정부에게:**

- 9. 전쟁범죄, 특히 “위안부”와 강제노동, 세균전 실험에 의해 피해를 당한 개인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창설할 것.
- 10. 2차 세계대전과 식민지배와 관련된 남아있는 문서를 공개할 것.
- 11.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인 전사자를 추모하는 새로운 기념관을 설립할 것.
- 12. 내각인사들이 일제시대를 찬양하거나 경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자제시킬 것.

**한국 정부에게:**

- 13. 독도/다케시마 주변의 중간수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어민들이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협정을 마무리지를 것.
- 14. 한국은 현존하는 국경조약을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
- 15.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보상수준이 미미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금을 창설할 것.
- 16. 한일협정에 의해 제공된 경제원조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일본에게 사의를 표할 것.

**중국 정부에게:**

- 17. 인터넷 사용자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일본 및 서양의 매체에 더 많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것.
- 18. 동지나해에 있는 원유와 가스매장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할 것.
- 19. 스프래틀리 열도에 대한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행동규약을 모델로 삼아 센카쿠/다오위 분쟁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동규약을 개발할 것.
- 20.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

**미국 정부에게:**

- 21.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안보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한미일 삼자간의 정책조정을 강화할 것.
- 22. 2차대전에서 노획하고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관한 연구자들의 문서를 공개할 것.

서울/브뤼셀, 2005년 12월 15일

## 동북아시아의 갈등의 기류

### I. 서론

지난 10년 동안 역동적인 선진경제로 급부상한 중국과 한국의 출현은 동북아시아지역내 경제패권국으로서의 일본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은 새로운 안보, 에너지, 그리고 환경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민주화와 세대교체를 함께 이룬 한국은 그 영향으로 반공주의에 기반한 친미국가에서 관계가 소원했던 형제국가인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변화들은 세나라 모두에서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자신감은 ‘보통국가화’에 대한 일본의 열망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이것은 또한 동북아균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세기 전 겪었던 식민국가의 비극적 운명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한국정부의 열망과도 배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정치인들과 이것들을 확대, 왜곡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언론매체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을만큼 유혹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경로들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족주의의 발생은 한중일 세 나라의 오랜 갈등요소인 영토와 역사문제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들이 비록 세나라 사이의 군사적대립으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세 나라 안에 이웃국가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치고 있다. 세력균형의 변화로 인해 파급되는 보다 중대한 일들이 이와같은 작은 현안들에 매몰됨으로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주석이 고이즈미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거부한 것과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고이즈미 일본총리와의 회담중 거의 3분의 2의 시간을 역사문제에 할애를 했던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핵문제와 같이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들을 나두고서 말이다. 중국의 탕자쉬엔 국무위원은 11월 11일 방문한 일본 민주당 대표 마에하라 세이지와의 회담에서 “중일 관계가 1972년 관계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했다.<sup>2</sup> 국가간 공식적인 교류들도 동북아시아 지역 제도의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긴장들은 지표면 바로 밑에 깔려있는 용암과 같아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터져나올 것만 같은 활화산 같은 존재이다. 예를 들면 2005년 2월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함으로써 한국에서는 독도라 불리는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sup>3</sup> 이에

<sup>1</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아시아보고서 N°89, *한국인의 대북인식: 다른 별로부터 온 형제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 2004년 12월 14일.

<sup>2</sup> 조선일보, 2005년 12월 13일..

<sup>3</sup> “Shimane Touts ‘Takeshima Day’”, *Japan Times*, 17 March 2005.

한국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일본방문과 ‘한일우호협력의 해’를 기념해 예정되어 있던 일부 행사들을 취소하고 한국 관광객의 독도관광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다. 시위자들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장기를 태우고 그들 중 두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기까지 했다.<sup>4</sup> 한국인들은 일본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 대해 해괴하고 호전적인 이미지들을 인터넷상에 올리기 시작했다.<sup>5</sup> 시즈오카 대학의 나카모토 요시히코 국제관계학 교수는 “우리 학생들은 중국인과 한국사람들이 일본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sup>6</sup> 이에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한국 정부의 독도 홈페이지를 해킹해,<sup>7</sup>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다”라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응수하였다.<sup>8</sup>

4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시도에 반대하며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시위는 시위대가 일본기업과 외교공관들을 공격하면서 폭력시위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주일 중국대사를 소환해 항의하고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sup>9</sup> 중국과 한국은 고이즈미가 지난 2005년 10월 17일 논란이 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으며,<sup>10</sup> 이에 반해 일본

은 중국이 9월부터 분쟁지역인 동지나해에서 석유시추를 시작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sup>11</sup>

비록 한중 관계가 한일, 중일관계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지만 이들 관계 역시 전혀 논란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대국가인 고구려를 둘러싼 역사논쟁은 양국으로 하여금 고구려가 누구의 역사에 속한 것인가에 대해 증명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양국은 개별 연구팀을 구성해 그 연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였다. 2004년 9월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1909년 청나라와 일본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sup>12</sup>

이러한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중일 각국의 최대 현안을 풀어감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가 있어야 함을 정작 일본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시위대들이 미영사관을 공격하는 모습은 세계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중국의 목표 달성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한국은 북한과 화해를 통해 한반도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웃국가들로부터 든든한 경제적, 정치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민족주의나 과거의 원한에 근거한 감정들은 정치인에게는 표를 얻게 해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 외교과제들을 달성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지나친 민족주의는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만성질환과도 같아서 비록 그 병을 완치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최소한 그 병이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할 수는 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영토분쟁과 역사논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sup>4</sup> “S. Korea Protest over Japan Claim”, BBC News, 16 March 2005.

<sup>5</sup> 시사저널, 2005년 4월 5일, 92-94 쪽. 이 잡지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개똥을 밟고 있는 이미지와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하는 이미지도 있다.

<sup>6</sup> Crisis Group interview, Tokyo, 25 August 2005.

<sup>7</sup> <http://www.dokdo.go.kr>.

<sup>8</sup> 조선일보 2005년 10월 24일..

<sup>9</sup> “China Won’t Apologise to Japan Over Protests”, Associated Press, 18 April 2005.

<sup>10</sup> “Japan PM Visits Yasukuni Shrine”, BBC News, 17 October 2005.

<sup>11</sup> Anthony Faiola, “Japan-China Dispute Escalates”, *The Washington Post*, 22 October 2005, p. A17.

<sup>12</sup> Yoon Won-sup, “Gando New Source of Friction”, *Korea Times*, 8 September 2004.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동북아지역내 새로운 지역질서를 세우는데 노력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II. 영토 분쟁

동북아시아의 영토분쟁은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파키스탄의 영토분쟁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대부분의 영토분쟁은 국가들 사이에 있는 작은 무인도를 둘러싼 각 국가들의 영유권주장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때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그 섬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섬을 둘러싸고 있는 해양자원들의 가치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툼들은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이상으로 민족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이에 대해 무인도소유권에 대한 국제법이 모호한 것이 이 섬들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논쟁들을 풀어가는데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공식적으로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일본에게 주권을 넘겨주기 위한 협상들이 논의되었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은 동북아시아의 수많은 작은 섬들의 영유권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말았다.<sup>13</sup> 이러한 지역분쟁은 최근들어 자원확보와 급증하는 민족주의로 인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어업량은 그 양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sup>14</sup> 반면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상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된 후로 세계 어업의 거의 99 퍼센트 이상이 각 국가들의 관할 권한에 놓이게 되었다.<sup>15</sup> 세계석유자원량의 고갈은 해안국가들로 하여금 그들 영토에 속한 대륙붕에

<sup>13</sup> Seokwoo Lee,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and th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vol. 11, no. 1 (January 2002), pp. 64-146.

<sup>14</sup> Mark Valencia, "Maritime Regime Building: Lessons Learned and Their Relevance for Northeast Asia", *Publications on Ocean Development*, vol. 36 (21 June 2001), p. 87 and passim.

<sup>15</sup> 유엔 해양문제 및 해양법 사이트 참조: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historical\\_perspective.htm#Exclusive%20Economic%20Zone](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historical_perspective.htm#Exclusive%20Economic%20Zone).



있는 석유과 가스유전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각 국가들은 국경지역의 해협이 교차하는 배타적 수역근처의 작은 돌섬인 무인도에 대해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아니면 상상이든 일본의 제국주의와 결합되어 더 확대되었다.

## A. 독도/다케시마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섬은 동해/일본해에 있는 2개의 작은 바위섬으로 전체 면적이 0.186 km<sup>2</sup>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0km 해상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나와섬에서 서쪽으로 157km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sup>16</sup> 식수의 부족으로 그 섬은 역사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정부는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독도경비대를 파견해놓고 있다. 이렇듯 주거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영유권분쟁은 고문서와 고대 독도사용흔적을 비교, 분석하는 것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서기 512년 한국의 고대국가였던 신라의 우산국과 일치함을 들고 있다. 한국은 독도가 한국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고대문서와 지도들을 제시하고 있다.<sup>17</sup> 또한 17세기에 일본 어부들이 계속적으로 독도를 침입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한국어부가 일본정부로 하여금 독도는 한국땅임을 인정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독도영유권에 대한 또다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sup>18</sup>

반대로 일본은 1483년 조선왕이 범죄자와 세금 포탈자들이 독도로 피난갈 것에 대비해 백성들이 울릉도로 여행가는 것을 금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은 울릉도는 조선의 통치권의 지역이었다고 주장한다. 17세기에 도막부는 일본어부들이 울릉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울릉도로 가던 길에 많은 어부들이 다케시마에 들러 쉬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두 영역을 다스렸던 것은 일본이었다고 주장한다.<sup>19</sup>

1905년 일본어부들의 요구에 메이지정부는 공식적으로 다케시마를 오키나와섬의 일부로 포함시켰다.<sup>20</sup> 이를 들어 일본은 국제법상에서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을 한국인들은 일본 식민지하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조약이었다고 보고 있다.<sup>21</sup> 따라서 일본인들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며 독도 영주권을 주장하며 나오는 것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본식민지시절의 뼈아픈 기억들을 떠올리게 한다.<sup>22</sup> “우리 나라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떤 나라든 식민지시대의 유산을 제거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독도수호운동에 헌신적인 김소라 시민단체 대표는 말했다.<sup>23</sup>

제 2차 세계대전 종전후 승전국들은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식민국가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기 문안에

<sup>16</sup> 본 보고서 부록 A 지도 참조.

<sup>17</sup> 독도 문서 개요, 해양수산부, 2004년 3월.

<sup>18</sup> Shin Yong-ha, “A Historical Study of Korea’s Title to Tokdo”, *Korea Observer*, Autumn 1997, pp. 333-358.

<sup>19</sup> 시네마현 홈페이지: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eng/take4.html>.

<sup>20</sup>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eng/take6.html>.

<sup>21</sup> 한국의 외교통상부, 2005년 7월 18일.

<sup>22</sup> Crisis Group interview, Yanada Takayuki, former special adviser to the speaker of the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Tokyo, 27 June 2005.

<sup>23</sup> 김설아 (독도수호대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서울, 2005년 8월 24일.

독도/다케시마가 한국 또는 일본 소유라고 번갈아가면서 언급이 되었다(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 독도의 영어명 이름, 프랑스 탐험가 리앙쿠 록스의 이름을 따). 이로 인해 결국 그 섬은 평화조약에서 모두 배제되어버렸다.<sup>24</sup> 1952년 미국이 일본에게 주권을 되돌려 주려고 할 때 한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먼저 독도를 포함한 해안 경계선을 공표해버렸다. 소위 “이승만 선”이라고 불리는 이 영해선은 한국정부가 동해와 일본해를 구분짓는 선으로 여전히 유효한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 선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다. 19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회담에서 한국 대통령 박정희는 미국 국무장관인 딘 러스크에게 독도가 여전히 “골치아픈 문제”로 남아있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차라리 독도를 폭파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sup>25</sup> 그 당시 그 회담 자리에 있었던 한국 외교관은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고 다만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 박대통령이 불만을 나타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sup>26</sup> 그 후 한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독도영주권을 보호 및 주장했다. 독도에 선착장을 세우고, 경비병을 상주시키고, 보트여행을 조직하면서 독도에 대한 주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평화적인 협상으로 타결되지 않는 분쟁의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유엔해양법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되는 것을 반기고 있는 반면<sup>27</sup> 한국은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독도가 이미 한국영토로 인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재판소에 이 문제가 회부되면 결코 좋을게 없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국제재판소가 일본에 좀더 우호적이라는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독도문제가 국제분쟁화가 되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도 한국 정부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sup>28</sup> “독도 영주권에 있어 한국이 역사적으로 훨씬 더 큰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영토분쟁에 있어서 국제재판소는 식민통치를 했던 국가에 좀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다”라고 이석우 인하대 국제법 교수는 말했다. 또한 “과거 샌프란시스코 조약체결 당시 초기 문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 넘겨 줄 계획이 있었던 사실을 상기해볼 때 국제재판소가 일본에 우호적일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sup>29</sup>

독도/다케시마의 가장 민감한 사항은 어부들과 관련된 일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한일 양국은 어업협정을 통해서 양국 어부들이 공동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중간수역”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어부들은 한국어부들이 그 지역을 독점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sup>30</sup> 일본의 주요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 사설에 따르면 다케시마날을 제정한 배경에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어업계의 불만들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한다.<sup>31</sup>

어업권리에 대한 논쟁들은 종종 양국간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 2005년 6월 1일과 2일 한일 양국 해안 경비대가 일본 영해를 침입했다고

<sup>24</sup> Seokwoo Lee,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and th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vol. 11, no. 1 (January 2002), pp. 127-144.

<sup>25</sup> 위의 논문 126 쪽에서 재인용.

<sup>26</sup> 정해영과의 인터뷰, 2005년 11월 5일.

<sup>27</sup> Crisis Group interview, Yanada Takayuki, former special adviser to the speaker of the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Tokyo, 27 June 2005.

<sup>28</sup> Crisis Group interview, Tokyo, 27 July 2005.

<sup>29</sup> 이석우와의 인터뷰, 서울, 2005년 8월 25일.

<sup>30</sup> Crisis Group interview, Yamaoka Kunihiko, *Yomiuri Shimbun*, Tokyo, 7 November 2005 (in Japanese).

<sup>31</sup> “Time for Straight Talk on Takeshima Issue”, *Yomiuri Shimbun*, 17 March 2005 (in Japanese).

추정되는 한국어선 양쪽을 밧줄로 묶은 뒤 30 시간 이상 서로 대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상호대치는 결국 한국정부가 해당 어선의 선장을 자국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해결되었다.<sup>32</sup> 그러나 이 사건은 선장 한 개인의 행동에 의해서 야기되었던 것일 뿐 독도를 둘러싼 긴장관계에 의해서 발생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타협과정이 어업문제와 관련되어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일본에게 독도는 중국, 북한, 러시아의 비행기와 군함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다기지라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 또한 가지고 있다.<sup>33</sup> 이석우 인하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본에게 독도문제는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 대만과의 분쟁이나 1945년 러시아에게 점령당했던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분쟁만큼은 중요하지않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분쟁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독도영주권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일본이 독도를 포기했을 경우 그것이 다른 영토분쟁에 미칠 파급효과를 일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34</sup>

비록 아주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불러 일으키는데 독도만큼 파급효과가 큰 것도 없다. 한국인라면 누구나 비록 그 가사를 다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알고 있다. 그 노래는 수없이 불러졌고 최근에는 댄스버전으로까지 리메이크되어 불러지고 있다.

<sup>32</sup> 조선일보, 2005년 6월 2일.

<sup>33</sup> 김병렬(동북아평화를 위한 역사진실위원회)와의 인터뷰. 또한 이 부분은 독도/다케시마를 일본으로 넘겨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정치보좌관인 윌리엄 세볼드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서 언급했었다. Lee,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op. cit., p. 130.

<sup>34</sup> 이석우와의 인터뷰, 2005년 8월 25일.

이동통신회사인 KTF 와 같은 기업에서도 독도를 자신들의 마케팅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sup>35</sup> 일본의 시네마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을 때 서울의 한 택시 운전사는 “모든 승객들이 일본과 전쟁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sup>36</sup> 2005년 6월 서울 지하철역에서 열렸던 독도를 주제로 한 중학생 그림전시회에는 호전적인 민족주의적성향을 나타낸 그림들이 많이 전시되었다.<sup>37</sup> 광화문 지하철역에서 열렸던 다른 전시회에서는 반일정서 대신 “독도 사랑”에 초점을 맞춘 그림들이 전시되었었다. 울릉도에 있는 모든 택시 범퍼에는 “독도는 우리땅, 쓰시마(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섬)도 우리땅”이란 스티커가 붙어 있다.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 안내인의 말에 따르면 시네마현의 조례제정 후 하루 방문객이 200명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sup>38</sup>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독도/다케시마 문제는 한일 양국간 관계변화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많다.<sup>39</sup> 양국간 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영토분쟁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상호관계가 호전되었을 경우에는 독도/다케시마 문제 역시 잠잠해지는 것이다.<sup>40</sup> 일본논평인들에 따르면 현재 발생한 문제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일로써 중앙정부가 관여할 권한이

<sup>35</sup> 시사저널, 2005년 4월 5일, 94쪽.

<sup>36</sup> 2005년 4월에 만난 한 택시 기사와의 인터뷰.

<sup>37</sup> 이들 사진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aog.2y.net/forums/index.php?showtopic=1558>.

<sup>38</sup> 인터뷰, 울릉도, 2005년 10월 22일.

<sup>39</sup> 한일관계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Kim Ho-seop, “Evaluation and Prospects of Two Years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Japan Polic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40<sup>th</sup> Anniversary of the Normalis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Seoul, 2-4 June 2005 (in Korean).

<sup>40</sup> Crisis Group interview, Yanada Takayuki, former special adviser to the Speaker of the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Tokyo, 27 June 2005.

없다고 한다.<sup>41</sup> 실제로 일본 외무성은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단념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sup>42</sup>

## B. 센카쿠/다오위

센카쿠/다오위(각 일본, 중국명)는 동지나해상에 위치한 8 개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둘러싸고 일본, 중국, 대만 세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열도는 총 면적 6.32 km<sup>2</sup>로서 대만 북동쪽 200km, 오키나와 서남쪽 약 300km, 그리고 중국대륙 동쪽 300km 상에 위치해 있다.<sup>43</sup> 센카쿠/다오위는 석유, 가스등 중요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독도/다케시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센카쿠/다오위분쟁은 대만이 가진 애매한 위치때문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일본은 동 도서가 1885년 오키나와현이 조사하기 전까지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1895년 1월 14일 일본은 센카쿠를 공식적으로 일본영토로 영입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따라서 일본은 그 이전부터 센카쿠가 일본영토였기때문에 1895년 5월 청-일전쟁 후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중국이 일본에 양도한 섬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sup>44</sup>

중국인들은 16세기 명나라 사절단들이 조공을 바치러가던 항해중에 가장 먼저 류큐제도(오키나와)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일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오키나와가 미국에 이양될 때 센카쿠/다오위는 오키나와 영토에 편입되었다. 그 협상과정에 중국, 대만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1968년 유엔이 이 부근의 해저에 석유를 포함한 막대한 천연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부터 센카쿠/다오위를 둘러싼 각 나라의 영유권 주장이 시작되었다. 이후 1971년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시 이 섬이 일본령으로 공식편입되었을 때 중국, 대만으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sup>45</sup> 미국의 공식입장은 “조약개정이 이 섬에 관한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 섬을 둘러싼 영유권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46</sup> 일본의 극우민족주의자들은 1990년과 1996년에 일본의 센카쿠섬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동 섬에 등대를 세우기도 하였다.

중국은 시종 일관되게 다오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 역시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중국의 반환노력에 장애가 되고있다. 1970년대 대만학생들은 다오위의 일본반환에 항의해 대규모 학생시위를 벌였다.<sup>47</sup> 대만국회인 입법원은 1999년 해양과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포함된 영토에 관한 법안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일본 해안경비대가 그 섬으로 접근하던 대만어선들을 쫓아낸 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대만어부들은 정부가 그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는 불평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이

<sup>41</sup> Crisis Group interview, Kobayashi Yutaka, House of Councillors, Tokyo, 27 June 2005.

<sup>42</sup> “Local Assembly Joins International Dispute”, *Asahi Shimbun*, 10 March 2005 (in Japanese).

<sup>43</sup> 이러한 거리는 열도의 중심에서 측정된 것이다. 가장 큰 섬인 조쓰리/다오위로부터의 거리는 대략 대만으로부터 170km, 오키나와로부터 410km 이다. 이에 대한 정보는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war/senkaku.htm>.

<sup>44</sup> Information from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bsite: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senkaku/senkaku.html>.

<sup>45</sup> Seokwoo Lee,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op. cit., pp. 88-91.

<sup>46</sup> Larry A. Niksch, “Senkaku (Diaoyu) Dispute: The U.S. Legal Relationship and Oblig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30 September 1996. CRS’s Mark Manyin brought this report to Crisis Group’s attention.

<sup>47</sup> “Reflections on the Diaoyutai Movement”, *Taiwan News*, 23 April 2001.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만영해와 근접하게 설정함으로써 대만어선이 일본경비병에 의해 종종 나포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럴 경우 많은 벌금을 물고서야 겨우 풀려나곤 한다.<sup>48</sup>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대만어부들은 일본 어선들이 대만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오기만 하면 포획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sup>49</sup>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중국국기를 흔들면서까지 일본어선을 위협했다.<sup>50</sup> 문제는 일본이 대만을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다. 대만정부가 다오위문제에 상대적으로 침묵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만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이를 성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가급적 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sup>51</sup>

이 열도분쟁과 더불어 중-일 양국은 동지나해를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놓고서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두 나라 영토 중간지점을 대략 180 해상마일로 잡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륙의 한계를 확장해 일본에서 130 해상 마일 떨어진 곳까지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역시 바위가 돌출된 부분까지 확장해서 거기를 국경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상 섬으로 계속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280 만달러를 들여 오기노도리도 암초에 콘크리트 벽을 세운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sup>52</sup> 중국 잠수함의 일본영해 침투 역시 양국간 긴장을 극대화하였다.<sup>53</sup>

지난 몇 년동안 양국은 경쟁적으로 자원탐사를 벌여왔다. 일본은 중국이 2003년부터 비록 중국 영해에 있긴 하지만 일본측 석유매장량을 탐사할 수 있는 시추선을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4월 일본은 분쟁지역개발권을 위한 입찰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해 7월 테이코쿠 석유회사가 그 지역 탐사권을 따냈다.<sup>54</sup> 중국은 2005년 9월 시추선을 완공했고 그 해 10월부터 석유 시추를 개시했다.<sup>55</sup> 9월 회담에서 일본은 중국에 공동 개발을 제안했지만<sup>56</sup>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공동개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개발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초점을 둘 것을 주장하였다.<sup>57</sup>

### C.

좀더 오래된 분쟁으로는 압록강을 따라 쪽 펼쳐져 있는 만주와 간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있다. 이 지역이 중국 동북지역을 포함하여 최대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았는데 가장 최근의 논쟁은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알려진 두만강유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간도를 둘러싼 논쟁은 1712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조선왕조와 청나라간에 세워진 국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도를 둘러싼 모호함은

<sup>48</sup> "Fishing Boats to Protest Against Patrols", Central News Agency, 9 June 2005.

<sup>49</sup> "Fishermen Threaten to Seize Intruding Japanese Fishing Boats", *China Post*, 17 June 2005.

<sup>50</sup> "Xenophobic Government", *China Post*, 15 June 2005.

<sup>51</sup> 일례로 민진당의 타이치팡 의원은 "다오위섬은 대만에 속해있지않기때문에 일본과 분쟁을 벌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UND News*, 23 June 2005.

<sup>52</sup> Norimitsu Onishi, "Two Rocks in Hard Place for Japan and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1 July 2005.

<sup>53</sup> "Japan Demands Apology over Chinese Submarine Incursion", Agence France Presse, 14 November 2004.

<sup>54</sup> "Japan Approves Oil Drilling, China Protests", *China Daily*, 14 July 2005.

<sup>55</sup> Anthony Faiola, "Japan-China Oil Dispute Escalates", *The Washington Post*, 22 October 2005, p. A17.

<sup>56</sup> "China, Japan Resume Talks on Disputed Gas Drilling", Associated Press, 30 September 2005.

<sup>57</sup> Crisis Group interview by email, Chinese official, 30 November 2005.

“두만”이라는 용어로부터 파생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북한과 중국간의 경계가 되는 두만강을 뜻하기도 하고 송화강 북쪽지맥을 지칭하던 명칭과도 비슷하다. “두만”이라는 단어가 만주어로부터 파생되었고 1712년 문서에 사용되었던 한자가 지금의 두만강을 지칭하는 단어와 같지않다는 점이 간도지역을 둘러싼 중한간 분쟁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sup>58</sup>

19세기말 한국인들은 청나라가 1885년, 1887년에 세워진 국경선 확립을 위해 한족들의 만주 정착을 금지함으로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있던 만주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을사조약을 맺었을 때 관동군에 있던 일부 일본 관리들은 한중간 역사를 탐구하였고 그에 기반해 간도는 한국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거센 항의가 있는 후 1909년 일본과 중국 사이에 현재의 국경선을 결정짓는 조약이 맺어졌다. 한국 운동가들은 간도협약이 비록 법적으로는 주권국가간의 조약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식민지하에서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행동들이 그 이전부터 한중 간에 서로 잘 합의가 되어 있었던 국경선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일본 정부문서는 여기에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1950년 10월에 작성된 이 문서에 의하면 간도협약은 일본이 중국에게 한국의 영토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이에 따라 간도가 한국땅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맞다는 것이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연구원은 “제3자가 간도는 한국영토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sup>59</sup> 하지만 일본이 그 문서를 공개한 동기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여전히 미군정하에 있었던 1950년 10월 7일 미군 주도하의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남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이때 미국은 진격을 멈출 곳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작성을 위해 한국과 중국사이의 국경선이 어디인지 알아야 했다. 이를 위해 미군정관리들이 일본정부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었을 것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 문서는 영토를 둘러싼 한국의 주장에 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한정부가 현재까지 간도에 관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석우 국제법학자는 주장했다.<sup>60</sup>

1962년 중국과 북한간에 체결된 조약 역시 현재의 국경선을 인정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남북한 어느 누구도 간도를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한의 많은 운동가들은 1909년, 1962년 조약 모두를 무효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04년 9월 3일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 59명은 1909년 간도협약의 파기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한 노무현 정부와 외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sup>61</sup>

간도분쟁과 관련되어 중국과 남북한간에 고대국가인 고구려를 둘러싼 역사 분쟁이 있다. 고구려는 기원전(BCE) 1세기와 서기(CE) 7세기에 걸쳐 한반도 북쪽과 만주지역의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국가로서 고구려가 누구의 역사인가를 두고 중국과 남북한 간에 논쟁이 일고있다.<sup>62</sup> 한국 역사문헌에 따르면 고구려는 전통적으로 7세기후반

<sup>59</sup> , 2005 8 27 .

<sup>60</sup> , 2005 8 23 .

<sup>61</sup> , 2004 9 3 .

<sup>62</sup> BCE 는 “before common era”의 약자이고, CE 는 “common era”의 약자이다.

신라에 의해서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 존재했던 삼국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 동북지역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99년 이래로 중국교과서는 고구려가 중국영토의 일부분이었다고 가르치고 있다.<sup>63</sup> 2002년 중국정부는 이른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중국 사회과학계의 주도하에 중국 동북부 3성을 조사하여 그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고구려유적이 있는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역”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두 해 전 자신의 영토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를 유네스코에 등록시켰던 남북한 모두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구려역사논쟁은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다. 사실 7세기에 중국인, 한국인이라는 오늘날과 같은 민족적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고구려를 둘러싼 논쟁은 과거에 관한 것이기라기 보다는 사실상 현재와 미래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현재 영토는 17세기 명나라를 정복하였던 만주족에 의해 세워졌던 청나라때 대략적으로 정해졌다. 그 지역은 신장의 위구루인, 내몽고의 몽고인과 같이 강한 민족성을 가진 변방지역국가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소수 민족들의 분리요구에 대비해 중국정부는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서의 중국의 통합성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소수 민족이 태고적부터 그들 고유의 정부, 언어, 문화와 상관없이 이들이 속한 현 중국영토를 확고히 함으로서 향후 있을지 모를 소수 민족들의 분리, 독립요구에 대비하고

있다.<sup>64</sup> 이것은 5000년 이상 단일민족국가를 이루어 왔던 한국인의 믿음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중국 정부가 한반도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고 있다. 고구려재단에서 중국전략문서를 연구하고 있는 윤희택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 통일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한미양국이 연합하여 북쪽으로 개입해 올라올 것을 두려워한다고 한다. 그는 “만약 남한과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점령하게 되면 중국은 아마도 북한 북부지역이 한나라이래로 중국 영토였으며 조선 왕조에 의해 북쪽으로 확장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일부 학자들은 만약 남한과 미국이 북한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국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자 할 것이고 이때를 위한 법적근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sup>65</sup> 윤희택 연구원은 이것이 한반도 통일 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내다보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사람, 북한사람, 중국의 조선족, 그리고 북한탈북자들 모두가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에 뒤섞여 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한민족 네트워크는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간의 국경선을 희미하게 할 것이고, 이는 중국 동북지역을 한민족이 기반을 이루어 사는 곳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만주지역이 한국영토의 일부라는 주장과 맞물려 조선족은 물론이고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통일한국의

<sup>63</sup> 윤희택(고구려 연구소 선임연구원)과의 인터뷰, 서울, 2005년 9월 2일.

<sup>64</sup> 위의 인터뷰. 영토 내 소수 민족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의 문서 참조. Government White Paper, “Regional Autonomy for Ethnic Minorities in China”, available at <http://www.china.org.cn/ewhite/20050301/index.htm>.

<sup>65</sup> 윤희택과의 인터뷰.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sup>66</sup>

하지만 중국 조선족들을 광범위하게 인터뷰해본 결과 이와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조선족들은 5대에 걸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타민족과의 혼인비율이 채 5 퍼센트도 안될 만큼 강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한 조선족 중 그 누구도 “대(大)한국”의 일부가 되는 것에 관심을 나타낸 사람은 없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뒤따르고 있다. 즉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비교적 잘 사는 축에 속하지만 만약 그들보다 훨씬 잘 사는 남한과 통합하게 되다면 한순간 남한의 “가난한 친척”이 된 신세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조선족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sup>67</sup> 또다른 이유는 남한에서 받았던 조선족들에 대한 좋지않은 대우들때문이다. “조선족들은 남한에서 심한 차별대우를 경험한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어떤 차별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김강일 연변대학 정치학교수는 주장한다.<sup>68</sup> 또한 조선족들은 중국정부의 1가구 1자녀 산아정책과 같은 정부규제를 받고 있는 한족과 달리 별다른 규제를 받지않는등 그들 나름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sup>69</sup> 그렇지않아도 연변 조선족들의 인구가 1940 년도와 50 년도에 70 퍼센트 성장을 육박하던 것이 오늘날은 40 퍼센트도 채 못미치고 있는 실정에서 말이다.<sup>70</sup>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한 북중 국경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있는 현재 한국정부처럼 미래의

한국정부도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민족감정에 기반한 영토회복주의자들의 주장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의심할 나위없이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지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독일이 폴란드와의 국경을 오데르·나이세선으로 책정함으로써 주변국가들로 하여금 통일독일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처럼 한국 역시 통일후에도 현재의 국경지역을 준수할 것이란 협정을 중국과 체결해야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민족적열망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기때문이다.

<sup>66</sup> Yoon Hwytak, “China’s Northeast Project: Defensive or Offensive Strategy?”, *East Asian Review*, vol. 16, no. 4 (Winter 2004), pp. 99-121.

<sup>67</sup> Crisis Group interviews, Yanbian Autonomous Region, 16-24 September, 2005.

<sup>68</sup> Crisis Group interview, Yanji, 16 September 2005.

<sup>69</sup> Crisis Group interviews, Yanbian Autonomous Region, 16-24 September, 2005.

<sup>70</sup> Crisis Group interview, Cui Gen-jia, chairman, Ryongjeong March 13 Association, Yanji, 24 September 2005.



### III. 역사 분쟁

유럽과 달리 동북아시아에서는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때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잔혹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여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일본식 민통치로 인해 고통받았던 국가들에 대한 충분하고 진심어린 사과의 부재는 일본과 인접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과거 적대국들과의 진심어린 화해없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시도는 중국과 한반도에 군국주의 재등장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유럽이 통일 독일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반해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재무장을 두렵게 여기는 것은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처신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 A. 전쟁 범죄

20세기 초반 일본이 영토 확장에 대한 야심으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1937년 중국 일반 시민들과 군인들, 여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강간했던 난징 대학살의 경우에는 그 때 죽었던 사람이 최소 4만에서 최대 20만으로 추정된다고 한다.<sup>71</sup> 약 8만에서 10만의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의 여성들이 일본군대를 위한 성노예("위안부")로 끌려갔고,<sup>72</sup> 수많은 남녀들이 군수산

업 노동자로 징용되었다. 일본은 또한 하얼빈의 가장 악명 높았던 제 731 부대에서 전쟁 포로와 중국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까지 자행했다.<sup>73</sup>

독일의 경우와 달리 일본에서는 이러듯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대중의 마음속에 불분명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된 첫번째 원인은 승전국들의 뉘른베르그 전범재판과 도쿄 전범재판에 대한 이중적 접근법에 있다. 두 재판 모두 전쟁을 도모한 것과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역사학자 존 다우어의 주장에 따르면 도쿄재판은 전자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재판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에게 있어 도쿄 전범재판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3개국에 의해 이루어진 승자의 패자에 대한 일방적인 재판이란 인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고 이는 곧 일본인들이 전쟁에 관해 죄의식을 갖지않게된 계기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이 삼국은 일본지도자들이 타국가들을 침략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했던 바로 그 식민국가들이었고 따라서 이들 손에 의해 이루어진 전범재판은 일본인들에게 있어 "승리자의 정의"만이 작용하는 재판일 뿐이었기 때문이다.<sup>74</sup>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체결을 통해 주권을 회복한 직후 일본은 모든 전범들을 사면하였다. 일본이 1958년 수가모감옥에 있던 전범들을 마지막으로 모든 전범들을 다 사면하였던 바로 그해 서독은 나치가 저지른 범죄를 수사할 중앙정부기관을 설립했다. 그 때 이후로 서독은 10만여명의 사람들을 기소했고 그 중 6천 5백

<sup>71</sup> Honda Katsuichi, *The Nanjing Massacre* (Armonk, New York, 1999); see also Iris Chang, *The Rape of Nanking* (Penguin, 1997). 서양의 일부 일본학자들은 난징 대학살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리스 장의 연구가 일본인을 너무 단순하게 묘사했다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Peter Hays Gries,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 (Berkeley, 2004), pp. 81-84.

<sup>72</sup> Tanaka Yuki, *Hidden Horrors: Japanese War Crimes in*

*World War II* (Westview Press, 1996), pp. 92-100.

<sup>73</sup> Sheldon H. Harris, *Factories of Death: Japanese Biological Warfare, 1932-1945, and the American Cover-up* (New York, 2002).

<sup>74</sup> 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New York, 1999).

여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sup>75</sup>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1950년대동안 단 한명의 사람도 전범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초기 전범으로 기소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후 일본 경제계와 정치계인 여당인 자민당 설립과정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이들 중 가장 대표되는 사례가 1957년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 노부스케이다.<sup>76</sup>

이렇다고 해서 모든 일본인들이 자국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시민사회와 사회당을 주로 한 좌파계열의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일본이 전쟁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라야마 토미이치 총리 시절 주요 각료였던 고노 요헤이 외무성장관은 전시 성노예에 대한 정부조사를 통해 “일본군부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위안부설립 및 위안부 여성들을 관리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sup>77</sup> 그는 곧 희생자보상처리를 위해 “아시아여성을 위한 기금”을 설립했다. 하지만 수많은 위안부출신 여성들은 사적기금에 기반한 이 보상금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일본정부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78</sup> 일본 여성단체들은 2000년 일본 제국주의하에 침략당했던 국가들의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을 개최하였다. 이 재판은 천황 히로히토를 포함한 일본의 전범자들이 여성들의 성노예화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결론내렸다.<sup>79</sup> 하지만 이 행사를 주

관한 관계자들은 일본언론들이 이 재판을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sup>80</sup>

좌파들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필연적으로 일본 우파들로부터 강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한 예로 2005년 7월 26일 일본 우파 진영에 속해있던 한 사람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세워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비를 훼손하다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sup>81</sup> 이 역시 서독의 보수파들이 그들의 새로운 동맹인 서유럽국가들이 분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치즘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과는 상반된다.<sup>82</sup> 국가가 양분됨으로 인해서 서독은 일본보다 지난날 적대국들의 원조가 더욱더 절실했다. 특히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서독은 민주주의사회로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대중들의 여론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과거 독재통치하에서 전후 보상문제에 관해 일본과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민주적인 정권으로 변화된 시점에서 권위적인 정부하에서 맺어졌던 조약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은 기실 당연할 일이다.<sup>83</sup>

## B. 미국의 역할

전후 미군정은 일본이 민주주의국가로 전환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군정 통치관

<sup>75</sup> Karasaki Taro, “Why Japanese Wartime Apologies Fail: A German Perspectiv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Asahi Shimbun*, 9 May 2005.

<sup>76</sup> Ian Buruma, *Inventing Japan: 1853-1964* (New York, 2004).

<sup>77</sup> “Statement by the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on the result of the study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4 August 1993, <http://www.mofa.go.jp/policy/women/fund/state9308.html>.

<sup>78</sup> Crisis Group interview, Nishino Rumiko,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Network Japan, Tokyo, 28 June 2005.

<sup>79</sup> Information about the tribunal is available at [http://www1.jca.apc.org/vawww-net-japan/english/womenstribunal2000/whats\\_tribunal.html](http://www1.jca.apc.org/vawww-net-japan/english/womenstribunal2000/whats_tribunal.html).

<sup>80</sup> 신혜수(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와의 인터뷰, 2005년 9월 30일.

<sup>81</sup> “Repairs Begin on Defaced Cenotaph Ahead of Rites”, *Japan Times*, 2 August 2005.

<sup>82</sup> Jennifer M. Lind, “Apologies and Threat Reduction in Postwar Europe”, presented at the Memory of Violence Workshop,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4-25 January 2003, available at [http://web.mit.edu/rpeters/papers/lind\\_apologies.pdf](http://web.mit.edu/rpeters/papers/lind_apologies.pdf).

<sup>83</sup> Crisis Group interview by email, Funabashi Yoichi, *Asahi Shimbun*, 2 December 2005.

들이 전후 일본헌법을 작성했는데 이는 민주주의 정신과 여성들과 노조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헌법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항목인 전쟁의 영원한 포기를 규정하고 어떠한 군사력도 가지지 않을 것을 명시한 헌법 9조 또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연구자인 이안 브루마에 따르면 미군정은 권력이양에 있어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다고 한다. 즉 기업가들이 가졌던 기존의 권력을 일본 권력 구조하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관료들에게 이양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sup>84</sup>

하지만 이러한 권력 이양을 시도하는 와중에도 미국은 일본의 잘못을 추궁함에 있어 매우 선택적이었다. 도쿄 전범재판은 진주만공격과 전쟁포로에 대한 가혹한 행위등 서구 동맹국들에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위들에만 초점을 두었지 일본이 아시아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행했던 가혹행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도쿄재판에 단 한 사람의 한국인도 참석시키지 않았다.<sup>85</sup> 가장 악명높은 사례로 미국은 생체실험결과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그 사건에 대한 증거를 덮어버렸다.<sup>86</sup>

일본인들의 전쟁에 대한 죄의식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히로히토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처벌도 하지 않음으로서 더욱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더글라스 맥아더 지휘하에 있던 미군정은 천황 히로히토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서 일본인들이 미군정에 훨씬 더 우호적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악명높은 사례로 도쿄 전범재판 당시 전시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를 심문하던 중 천황을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검사가 그 재판장을 휴회한 적이 있었다. 그 재판은 다음날 속개되었고 도조는 전날

증언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sup>87</sup> 오늘날까지도 미일 양국의 문서보관실에 있는 천황의 책임에 관한 문서에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sup>88</sup>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천황을 보호하기로 한 미군정의 결정이 미군정에 대한 일본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지만 반면 일본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저지른 전쟁에 대해 무감각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했다고 한다. 일본 역사학자 타나카 유키에 따르면 천황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이 강조되던 전시동원체제하에서 개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sup>89</sup> 이런 상황에서 천황에 대한 면제권은 일본 국민들 어느 누구도 전쟁시 저지른 행위에 대해 비난받고 비난하지 못하도록 했다. “천황이 유죄가 아닌데 어떻게 그의 이름으로 모든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았던 사람들이 죄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오카모토 미츠요 히로시마 슈도 대학의 평화학교수는 강조했다. 오카모토 교수는 누구도 비난받지 않는다면 과거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만들어 전시체제에 대한 향수마저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sup>90</sup> 역사교과서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대표인 타와라 요시프마에 따르면 전쟁에 대한 천황의 책임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지만 언론이 이를 다루지 않음으로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고 한다. “우파들이 이 정보를 사회에 퍼뜨릴 수 있는 대다수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나같은 사람들이 쓰는 전시정복자들에 관한 책들은 거대 출판사들에 의해 출판이 거부되고 대형서점에서도 판매되지 못한다”는 것이다.<sup>91</sup> 이러한 타와라의 주장은

<sup>87</sup> Dower, *Embracing Defeat*, op. cit.

<sup>88</sup> Harris, *Factories of Death*, p. xv.

<sup>89</sup> Tanaka, *Hidden Horrors*, op. cit., pp. 201-206.

<sup>90</sup> Crisis Group interview, Okamoto Mitsuo, Hiroshima Shudo University, Hiroshima, 30 July 2005.

<sup>91</sup> Crisis Group interview, Tawara Yoshifuma, director, Children

<sup>84</sup> Buruma, *Inventing Japan*, op. cit.

<sup>85</sup> Dower, *Embracing Defeat*, op. cit.

<sup>86</sup> Harris, *Factories of Death*, op. cit.

2005년 8월 일본서점들을 둘러보았을 때 증명되었다. 일본 군부의 용맹무쌍함을 다룬 책은 10권이 훨씬 넘었지만 전쟁의 어두운 면을 다룬 책은 단 한 권 밖에 없었던 것이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 사회의 변화에 대해 더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대신 아시아 지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보루로서 일본을 전략화하기 시작하였다.<sup>92</sup> 이를 위해 미국은 전후 유럽국가들간에 화해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자간협정 대신 아시아지역에 있는 여러 동맹들간에 양자협정을 더 선호했다.<sup>93</sup> 비록 미국이 한일협정체결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은 일본이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한국이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한 후 동아시아 냉전의 양극단에 서게 된 중국과 일본은 과거사청산과 관련해 어떠한 협상도 하지않았다. 그리고 전범처리에 대한 사회적관심은 급격히 떨어졌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미국은 개별 미국인들에 의해 제기된 일본의 전범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향후 일본이 한중 양국과 국교수립협정을 맺을 때 선례로 작용하게 되었다.<sup>94</sup> 일본 아사히신문 칼럼니스트인 요이치 후나바시에 따르면 미국은 또한 2개의 핵폭탄 투하에 대해 도덕적책임이 제기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sup>95</sup>

최근들어 미국은 세계 어디에서 일어날 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보다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전환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도록 독려하고 있다.<sup>96</sup>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이미 관련법의 재해석과 새 법안등으로 충수를 이루고 있는 일본의 헌법 9조 개정운동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2004년 미국 국무부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은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기 위해서는 헌법 9조를 반드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sup>97</sup> 비록 일부 미국 관료들은 헌법 9조가 “병마개를 막는” 효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말이다.<sup>98</sup>

미일동맹의 끈끈함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거 적대국들사이에 신뢰와 화해가 이루어진 놀랄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sup>99</sup>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비단 중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 우산아래 있는 한국에게조차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화해가 실패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재무장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국의 관심 부족은 역설적으로 일본이 군사적, 정치적영역에서 대미 의존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타로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와 같은 일본 드골주의자들에게 인기를 더해주고 있다.

### C.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의 과오를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and Textbooks Japan Network, Tokyo, 28 July 2005.

<sup>92</sup> Buruma, *Inventing Japan*, op. cit.

<sup>93</sup> 이 문제에 대해서는 Amitav Acharya,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The Normative Origins of Asian Multilateralism”, Weatherhead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Working Paper 05-05, 22 July 2005, at <http://www.wcfia.harvard.edu/rsrhpapsum.asp?ID=1049> 참조.

<sup>94</sup> The text of the treaty is available at <http://www.taiwandocuments.org/sanfrancisco01.htm>.

<sup>95</sup> Crisis Group interview by email, 2 December 2005.

<sup>96</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아시아 보고서 N°100, *일본과 북한: 불화의 쫓점*, 2005년 6월 27일.

<sup>97</sup> “State Department Roundtable with Japanese Journalists”, 12 August 2004, Washington DC, <http://www.state.gov/secretary/former/powell/remarks/35204.htm>.

<sup>98</sup> Crisis Group interview by email, Funabashi Yoichi, *Asahi Shimbun*, 2 December 2005.

<sup>99</sup> Ibid.

신사참배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14 명의 A 급 전범들의 위패를 포함하여 태평양 전쟁때 죽은 전몰자들의 위패가 안치되어있는 일본 호국영웅들을 기념하는 신사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1870년 전쟁에서 군사들을 위한 축제의 장소로 세워졌다. 1888년 메이지유신후 전쟁에서 숨진 영혼들을 '호국 영령'으로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sup>100</sup> 야스쿠니 신사는 살아있지 않는 물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일본인 특유의 물한론적인 믿음에 근거하여 국가신사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신사가 되었으며 메이지유신에 의해 새로운 민족의 성지가 되었다.<sup>101</sup>

야스쿠니 신사는 나라를 위해 죽은 모든 혼령들을 기리는데 이 범주에는 비단 군인뿐만 아니라 간호사, 통신담당자, 폭탄투하로 인해 죽임을 당한 시민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거의 250만 여명의 위패가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되어 있고 현재 법무성이 위패안치를 허용하는 권한을 관장하고 있다.<sup>102</sup> A급 전범들은 1978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는데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A급 전범이란 미군정하에서 승전국들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불평등한 재판의 결과일 뿐이며 따라서 이들의 혼령을 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03</sup> 야스쿠니 신사의 관리들 1953년 A급 전범들을 포함한 전몰자들을 위한 추도시설 건립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 그들은 일본 국내 법상으로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04</sup> 이들이 도쿄 전범재판의 공정성여부에 대해 이를 제기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반면에 재판진행과

정내내 일본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던 인도인 판사 라다비노드 팔은 도쿄 전범재판에서 신사의 근거에 대해 탁월하게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신사가 단지 사유지라는 따라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측의 주장은 일본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실소만을 자아낼 뿐이다"라고 브래드 글로서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연구국장은 주장했다.<sup>105</sup>

세계 2차 대전이래로 다수의 일본 총리들은 천황 히로히토가 비록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된 이후 신사참배를 그만두긴 했지만 그의 신사참배를 따라<sup>106</sup> 그들 역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그의 계승자인 아키히토는 지금까지 한번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sup>107</sup> 1979년 오히라 일본 총리가 방문한 이후로도 계속 몇몇 총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 하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1985년 나카소네 총리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거행하자 문제는 달라지기 시작했다.<sup>108</sup> 한중 양국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나카소네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는 이들 국가들의 항의에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중국의 요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일본비판자들의 지적을 따른 것이었다.<sup>109</sup>

고이즈미의 거침없는 홍보는 자민당 우파들과 유족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sup>110</sup> 일본 보수파들은 고이즈미가 신사참배를 계속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내부조직력을 잘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sup>100</sup> Crisis Group interview, Ooyama Shingo, Public Relations, Yasukuni Shrine, Tokyo, 28 June 2005.

<sup>101</sup> Buruma, *Inventing Japan*, op. cit.

<sup>102</sup> Crisis Group interview, Ooyama Shingo, Public Relations, Yasukuni Shrine, Tokyo, 28 June 2005.

<sup>103</sup> Kase Hideaki, "The Problem of Yasukuni Shrine", at <http://www.nipponkaigi.org/reidai02/Key%20Issues/History/Yasukuni%20by%20Kase%20htm.htm>.

<sup>104</sup> 조선일보, 2005년 6월 27일.

<sup>105</sup> Crisis Group interview by email, 8 December 2005.

<sup>106</sup> Kase Hideaki, "The Problem of Yasukuni Shrine".

<sup>107</sup> Crisis Group interview, Okamoto Mitsuo, Hiroshima Shudo University, Hiroshima, 30 July 2005.

<sup>108</sup> Syukan Daiyamondo, 25 June 2005 (in Japanese).

<sup>109</sup> "Private Citizen Koizumi's Visits to Yasukuni Shrine and Japanese Diplomacy: A Call for a New Nonreligious War Memorial", *Yomiuri Shinmun*, 4 June 2005 (in Japanese).

<sup>110</sup> Crisis Group interview, Abe Tomoko, Japan House of Representatives, 28 June 2005.

좌파는 조직력에 있어 상대적인 열세와 분열을 면치 못하고 있다.<sup>111</sup> 총선 직후 종전 60주년 기념식행사에 있을지 모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두고 국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양분되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있었다.<sup>112</sup> 심지어 한 일본 외무성관리조차도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할 때마다 나의 일은 점점더 어려워진다”며 총리의 계속적인 신사참배에 대해 조용히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sup>113</sup>

재선후 고이즈미는 중국과 자국내 비판을 무릅쓰고 2005년 10월 17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sup>114</sup> 하지만 중견 일본 언론인은 그가 법복 스타일의 신도예복 대신 양복정장을 입었던 사실과 국 경일을 피해 신사참배를 했던 점 등에서 그 역시 외국의 비판여론을 고려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sup>115</sup>

이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한가지 대안은 특정 개인을 추도하는 것이 아닌 전몰자 전체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전쟁때 죽은 자들을 기념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그러나 종교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기념관이 되어야 한다. 이 제안은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에 의해 소집된 민간전문가 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기념관이 어떠한 성격을 띠어야 하는가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논의가 기울어져 갈 즈음 전문가 그룹은 다시 한번 그 기념관이 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한 국가로서 일본이 역사와 과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몰자들을 기념하고 평화를 염원할 수 있는 국립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에 대해 그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개인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될 것이다.<sup>116</sup>

2005년 11월 9일 전 자민당 부대표였던 야마사키 타쿠의 주도하에 국회의원들은 이 제안에 대해 초당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대체기념관건립은 요미우리그룹의 와타나베 츠네오 회장과 같은 보수인사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았다.<sup>117</sup> 어떤 이들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A급 전범들을 위한 예식을 더이상 행하지 말자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그냥 신사근처에 있는 다른 전쟁 기념지들을 방문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이러한 선택사항들 중에 일본의 차세대지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냐라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야스쿠니 신사는 그 자체로 위의 목적들을 이룰 수 있는 잠재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가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진영사(영혼을 달래기 위한 신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일본 전몰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적군의 영혼까지도 동일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진영사에서 정기적으로 사제에 의한 의식이 치뤄지고 있지만 전체가 철 울타리로 둘러쳐져

<sup>111</sup> Crisis Group interview, Yanada Takayuki, former special adviser to the speaker of the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Tokyo, 27 June 2005.

<sup>112</sup> “52% Polled Say Koizumi Should Halt Shrine Visits”, *Asahi Shimbun*, 27 June 2005 (in Japanese).

<sup>113</sup> Crisis Group interview, April 2005.

<sup>114</sup> 조선일보, 2005년 10월 25일.

<sup>115</sup> Crisis Group interview, Tokyo, 9 November 2005.

<sup>116</sup> Report of the Advisory Group to Consider a Memorial Facility for Remembering the Dead and Praying for Peace, 24 December 2002, [http://www.kantei.go.jp/foreign/policy/2002/1224houkoku\\_e.html](http://www.kantei.go.jp/foreign/policy/2002/1224houkoku_e.html).

<sup>117</sup> 조선일보, 2005년 7월 28일.

있어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 내지 않고 있다.<sup>118</sup>

#### D. 역사교과서

일본 역사교과서가 과거의 침략 행위를 서술하는 방식은 지속적인 논쟁의 불씨가 되어 왔다. 논쟁의 한쪽 편에는 중국인과 한국의 평론가, 그리고 교과서는 과거범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믿는 일본의 자유주의자와 교사들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일부 공직자와 정치인, 관료의 지지를 받는 우파 활동가들이 일본은 자학적인 태도를 버리고 좀더 애국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과서는 교육부의 지침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전쟁전의 교과서는 정부에 의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단지 한가지 종류의 전쟁역사만이 교육되었다. 1960년대 전반부까지의 교과서는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955년 자민당이 여당이 되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아시아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쟁과 관련된 모든 언급이 삭제되었다. 1965년 일본의 역사학자 레나가 사부로에 이러한 관행을 종식시키고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970년 첫번째 판결에서 그는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다.<sup>119</sup>

그러나 1980년 자민당은 또다시 교과서수정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내각의 권한을 강화했다. 중국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중 “침략”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도 이러한 수정에 포함되었다. 1982년 중국과 한국은 이러

한 수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응하여 일본정부는 아시아에서 일본의 행위에 대한 이미지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고 1980년 중반부터는 좀 더 균형 잡힌 교과서가 등장하게 되었다. 1984년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난징대학살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포함하였으며 1987년에는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언급되었다. 1994년부터는 모든 교과서가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배상문제논란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었다. 나아가 1997년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위안부배상문제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었다.<sup>120</sup>

그러나 역사적 기억상실증에 대한 발병은 다시 시작되었다. 1996년 여름 자민당과 이익집단은 위의 언급을 다시 삭제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시민단체인 새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이하 새역모)은 2001년에 후소샤출판사를 통해 그들 자체의 교과서를 출판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전쟁범죄를 무시하고 천황중심의 역사관을 제시한다는 비난을 받았다.<sup>121</sup> 예를 들어 난징 “사건”을 각주로 분류하여 “많은 중국 병사들과 시민들이 일본 군사에 의해 살해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문헌적 증거는 피해자의 숫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언급만을 하고 있다.<sup>122</sup> 각각의 학군에서 이 교과서의 채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다.<sup>123</sup> 교육부

<sup>118</sup> John Breen, “Yasukuni Shrine: Ritual and Memory”, Japan Focus, 3 June 2005, <http://japanfocus.org/article.asp?id=293>.

<sup>119</sup> Crisis Group interview, Tawara Yoshifuma, director, Children and Textbooks Japan Network.

<sup>120</sup> Crisis Group interview, Tawara Yoshifuma, Director, Children and Textbooks Japan Network

<sup>121</sup> Ahn Byung-woo, “Japan’s Inclination to the Right and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From Conflict to Trust-Building: A Discussion of Japan’s New History Textbook”, 18 July 2005, Columbia University.

<sup>122</sup> *New History Textbook* (Tokyo, Fusosha Publishing Company, 2005), p. 49 (English translation of Japanese original).

<sup>123</sup> Tawara Yoshifuma, “Textbooks Cycles and Historical Perceptions”,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Historical Perceptions and Textbooks*, Movement for Correcting Japanese Textbooks (Seoul, 2004, in Korean).

는 지역위원회에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지역교육위원회는 교사들을 선발하였다. 교과서에 전쟁범죄에 대한 언급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타와라 요시푸마는 “어떤 곳에도 이러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상당히 후진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주장하였다.<sup>124</sup> 2005년 7월 13일 오타와와 도치기현은 후소샤교과서를 채택한 최초의 자치제가 되었다.<sup>125</sup>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교과서 채택에 대항하여 자국정부에 로비 활동을 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sup>126</sup> 한국의 정치인들 또한 교과서문제를 알리기 위해 60만달러 이상을 모금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했다.<sup>127</sup> 도쿄의 스기나미구는 이 문제에 대한 4,500통의 편지를 받았으며 세통의 편지는 교과서채택을 반대하는 것이었고 한통은 교과서채택을 지지하는 식이었다. 그 중 83통은 한국에서 보냈으며 스기나미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서초구의 편지도 포함되었다.<sup>128</sup>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기나미구가 후소샤교과서를 채택하고 말았지만 일본 전역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새역모는 모든 학군의 10퍼센트가 이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사실상 0.4퍼센트만이 이를 채택하였다. 아마도 일본 사회에 역사분쟁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던 캠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 듯 하다. 윌리엄스 대학의 한일관계 전문가인 봉영식씨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들은 왜

아시아국가들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과연 일본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일본이 세계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배웠다.”<sup>129</sup>

교과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한중일 학자들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01년 한일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공통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sup>130</sup> 그러나 양국은 많은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쳤는지 아니면 한국을 현대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각주로 분류하였다.<sup>131</sup> 위원회는 2005년 5월에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첫 단계를 완료하였으며 공동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재소집을 계획하고 있다.<sup>132</sup> 정부간 공동연구와 별도로 한중일 민간학자들의 다년간의 노력끝에 세 나라의 언어로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제목의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가 출판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에 중국학자들의 독립성부족으로 문제에 부딪혔지만 그들의 참여를 통해 중국정부도 점차 이러한 공동연구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중국참여자들을 좀 더 지지하기 시작했다.<sup>133</sup>

<sup>124</sup> Crisis Group interview, Tawara Yoshifuma, director, Children and Textbooks Japan Network

<sup>125</sup> “City Opts to Use Revisionist Texts”, *Japan Times*, 14 July 2005.

<sup>126</sup> 양미강(아시아 평화와 역사 네트워크)와의 인터뷰, 2005년 8월 19일.

<sup>127</sup> 권선택 의원과의 인터뷰, 2005년 8월 22일.

<sup>128</sup> Crisis Group interview, Suginami-ku officials, Tokyo, 26 August 2005.

<sup>129</sup> Crisis Group interview, Bong Young-shik, Williams College, Seoul, 31 August 2005.

<sup>130</sup> 최정례(공동역사연구위원회)와의 인터뷰, 서울, 2005년 8월 29일.

<sup>131</sup> 조광(고려대 인문대 학장)과의 인터뷰, 서울, 2005년 9월 6일..

<sup>132</sup> 최정례와의 인터뷰.

<sup>133</sup> 윤희택과의 인터뷰.



역사교과서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학생들은 현대사에 대해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약 3시간정도 현대사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는 필수지만 일본사는 선택이다. 일본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고대사에 대해서 배우지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는다.<sup>134</sup> 학생들은 역사를 해석하는 것보다 이름과 날짜와 같은 지엽적인 내용들을 더 강조하는 대학입학시험 위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sup>135</sup> 모든 세대는 일본전쟁역사에 대해 매우 희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사히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35 퍼센트는 자신들의 경험으로 전쟁을 배웠다고 대답한 반면에 29 퍼센트만이 학교에서 배웠다고 대답했다.<sup>136</sup> 그러므로 개인적인 기억을 가진 세대가 사라지면 역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그와 함께 사라지게 된다.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58 퍼센트는 전쟁에 대해 거의 이야기 하지않거나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sup>137</sup> 위안부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로 현장체험을 다녀간 1개의 교토여자대학의 일본 학생들만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 배웠을 뿐이다.<sup>138</sup>

교육부가 교과서를 제작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교과서는 사립출판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육에 영향을 미치려는 보수파는 이러한 점을 활용해왔다.<sup>139</sup> 8개의 교과서 출판사 가운데 단 두 곳만이 현재 위안부를 언급하는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

다.<sup>140</sup> “우파에서 전쟁범죄나 또는 천황의 책임을 드러낼 수 있는 언론의 상당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영화는 제작될 수 없다”고 타와라는 말한다. 예를 들어 1997에는 홍콩프로덕션이 일본에서 “난징 193”라는 영화를 상영하였는데 우파세력이 이 영화를 공격하여 결국 극장은 상영을 취소하고 개인 상영관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다.<sup>141</sup> 이에 반해 미국의 점령으로 무력화 된 일본의 느낌을 강조한 후쿠이 하루토시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들은 흥행에 대성공했다.<sup>142</sup>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이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려는 기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만약 헌법 9 조가 변경되면 자위대는 어떤 곳이든 갈 수 있고 어떤 종류의 분쟁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새역모는 전쟁을 좀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기반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타와라는 주장했다.<sup>143</sup>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지도적인 NGO를 이끌고 있는 양미강씨도 이러한 우려를 나타냈다. “교과서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우리는 일본인에게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교과서를 기술하는 방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144</sup> 히로시마 슈도 대학의 오카모토 미츠오 교수는 우경화는 교과서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수파는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가르치도록 압력을 넣어왔다. 이는 많은 이들이 전쟁시대의 잔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행위들이다.

<sup>134</sup> Crisis Group interview, Yagi Ryuji, Forum for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Tokyo, 28 June 2005.

<sup>135</sup> Crisis Group interview, Abe Tomoko, Japan House of Representatives, 28 June 2005.

<sup>136</sup> “52% Polled Say Koizumi Should Halt Shrine Visits”, *Asahi Shimbun*, 27 June 2005 (in Japanese).

<sup>137</sup> Ibid.

<sup>138</sup> 서울, 2005년 9월 14일.

<sup>139</sup> 조광과의 인터뷰.

<sup>140</sup> Crisis Group interview, Tawara Yoshifuma, director, Children and Textbooks Japan Network.

<sup>141</sup> Ibid.

<sup>142</sup> Norimitsu Onishi, “For a Hungry Audience, a Japanese Tom Clancy”, *New York Times*, 9 July 2005.

<sup>143</sup> Crisis Group interview, Tawara Yoshifuma, director, Children and Textbooks Japan Network, Tokyo, 28 July 2005.

<sup>144</sup> 양미강과의 인터뷰.

<sup>145</sup> 작년에는 291 명의 교사들이 국가를 부르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sup>146</sup>

## E. 역사의 충돌: 한중일 역사 박물관 비교

### 1. 일본

일본의 박물관은 일본인들의 전쟁경험에 대한 이중적인 해석을 보여준다. 우익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의 패망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타국가들 사이에서 일본의 정당한 위상을 되찾음으로써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국가적 망신을 의미한다. 좌익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은 군국주의의 어리석음과 분쟁의 평화적해결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이해를 둘러싼 양측의 다름은 전쟁기념관들을 사이에 두고도 계속돼왔다.

야스쿠니 신사내에 위치한 유종관(有終館)은 1868년 메이지 유신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모든 전쟁을 각기 다른 방을 만들어 다루었다. 브로셔에서는 박물관이 일본의 “진정한 역사”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전시물은 일본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록을 왜곡한다. 이는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 병사들의 기념품이 전시장의 한쪽 벽을 차지하고 다른면에는 우익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이해한 전쟁의 역사에 대해 묘사되어 있다.

유종관은 일본의 침략을 아예 일축하고 있다. 중국침략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항한 자기방어의 일환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일본이 왜 수많은 군대를 중국에 보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전시물은 1931년 일본의 관동군에 의해 자행된

무크덴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sup>147</sup> 그들의 행위가 일본의 이익을 침해한 중국에 대한 자기방어였다고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왜곡 가운데 또 하나는 난징 대학살인데 유종관은 이 사건에 대해 일본군대가 민간인을 중국군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안전지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전지대는 난징의 중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마련한 것이었다. 일본군들은 안전지대 바깥에서 민간인을 강간하고 살해했고 외국인이 안전지대에서 빠져나가자 그 지대 안에서도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sup>148</sup> 런던의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의 한국일본학 학장인 존 브린은 “유종관은 전쟁을 영광스러운 것으로만 기억한다. 이것은 모든 일본전쟁의 사망자가 영광스럽게 죽은 것은 아니며 생명을 잃은 자들은(일본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그들의 생명을 낭비한 것이고 전쟁은 잔인했으며 비참한 것이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sup>149</sup>

만약 유종관이 일본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킨 행위에 대하여 적당한 구실로 둘러대려한다면 히로시마 평화박물관은 최초의 핵폭탄투하로 일본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주의적 질주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히로시마 원폭투하 이전의 전시물은 병참기지로써의 역할에 대해 다룬다. 난징합락을 축하하는 주민들 사진에는 일본군인들의 민간인학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히로시마박물관 전체에 걸쳐 원폭투하의 희생자들 중에 수많은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sup>145</sup> Crisis Group interview, Okamoto Mitsuo, Hiroshima Shudo University, Hiroshima, 30 July 2005.

<sup>146</sup> Norimitsu Onishi and Howard French, “Ill Will Rising Between China and Japan”, *New York Times*, 3 August 2005.

<sup>147</sup> Japanese agents placed a bomb on the tracks of the Japanese-owned Manchurian Railway and used the alleged attack as the pretense to invade Manchuria. See W.G. Beasley, *Japanese Imperialism: 1894-1945* (Oxford, 1987), pp. 188-194.

<sup>148</sup> Chang, *Rape of Nanking*, op. cit., pp. 106-108.

<sup>149</sup> John Breen, “Yasukuni Shrine: Ritual and Memory”, *Japan Focus*, 3 June 2005, <http://japanfocus.org/article.asp?id=293>.

과거에는 한국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비를 히로시마 평화공원 외부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한국인들이 이를 차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로시마 박물관장인 하타구치 미노루에 따르면 이 기념비는 본래 원폭투하 이후 조선의 마지막 왕의 아들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 한국인이 세운 것이라고 한다.<sup>150</sup> 이 기념비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했을때에 공원 내부로 옮겨졌다.

박물관장에 따르면 박물관의 목적은 원폭의 공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민족주의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인본주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sup>151</sup> 생존자와 그 후손들은 반핵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널리 알렸고 이들의 도덕적권위는 일본의 지속적인 “핵 알레르기”의 힘을 설명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나 과거에 일부 방문자들은 원폭박물관이 희생자들의 고통에 중점을 둔 반면에 일본이 다른 이들에게 가한 고통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물관은 전쟁중 일본의 행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원폭투하의 원인에 대한 전시물을 추가했다.<sup>152</sup>

## 2. 한국

한국의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식민지시대에 대한 하나의 해석만을 제시한다. 이는 탐욕스러운 일본 침략자들과 이를 방어하는 용감한 한국인에 대한 것이다. 일제시대 한국인의 부역 행위,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일본의 기여, 독립운동중 공산주의자들의 역할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다루어지거나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있다. 그러므로 박물관은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일본에 중

점을 두면서 한국사회를 지속적으로 분열시키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의 독립기념관은 모두 일제시대와 한국의 저항에 할애하고 있다.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의 수정에 대응하여 기념물을 제작하는 위원회가 형성되었다. 한국 정부는 기부금의 잔액으로 땅을 기부했고 독립기념관은 1987년 8월 15일 한국의 42번째 광복절에 개관하였다.<sup>153</sup>

전시물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인성을 강조한다. 많은 부분을 고문과 처형에 관한 사진들이 차지한다. 또한 가학적인 일본군에 의해 고문, 살해당하고 짐승처럼 대우받는 조선인들의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다. 이것들은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주로 근거로 삼은 것이고 실제로 여러 증거들은 일제 점령기의 만행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기념관은 민족주의와 반일본주의를 부각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기념관의 기획실장인 박걸선씨는 이러한 비판을 인정하지만 전시의 목적은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제국주의적침략의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sup>154</sup> 그는 매년 약 1백만의 방문객 중 약 2만명이 일본의 학생들로서 주로 견학을 통해 방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 일본 총리 무라야마는 여러 일본 입법자들과 함께 2차례 독립기념관을 방문했다.<sup>155</sup>

만약 독립기념관에 왜곡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식민지배자보다 피식민지자들의 행동일 것이다. 독립기념관의 가이드북에는 “국가주권을 다시 얻기 위해 목숨을 건 애국적인 독립투사들이 이끌었던... 전체 [한국]국민은 외세의 통치하에 있었던

<sup>150</sup> Crisis Group interview, Hataguchi Minoru, director, Hiroshima Peace Museum, Hiroshima, 1 July 2005.

<sup>151</sup> Ibid.

<sup>152</sup> Crisis Group interview, Mizumoto Kazumi, associate professor, Hiroshima Peace Institute, Hiroshima, 1 July 2005.

<sup>153</sup> 박걸선(독립기념관 기획실장)과의 인터뷰, 2005년 9월 7일.

<sup>154</sup> Ibid.

<sup>155</sup> Ibid.

치욕의 시기를 독립을 위한 자랑스러운 투쟁으로 전환시켰다”고 적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은 한국민을 분열시키고 일본의 강점을 용이하게 했던 친일파의 활동과 심각한 이념갈등을 경시한다. 19세기말 일본군대가 탄압했던 동학운동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면 이전의 중국군대의 원조하에 이루어졌던 조선정부에 대한 저항은 강조하지 않는다. 친일에 대한 논의는 주로 1905년 일본의 강점시기의 일부 악명 높은 반역자들에 한하고 있다. 독립 운동가들 사이의 심각한 차이점과 잦은 내분을 경시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역할을 무시했다. 또한 규모가 작고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게릴라식 저항들이 일제에 대한 완전한 저항전쟁으로 묘사되고 있다.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는 역사적 기억이 얼마나 선택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독재자들이 1980년대까지 반체제 인사들을 이 형무소에 투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물은 일본 식민정부에 의해 독립운동가들을 구금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sup>156</sup>

### 3. 중국

최근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중국의 반일감정과 박물관의 확산은 맞물려 있다. 냉전시대 중국 정부의 홍보는 내전에서 국민당을 상대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승리에 중점을 두었다. 일본에 대한 전쟁은 강조되지 않았고 전쟁 잔학행위에 대한 논의는 금지되었다. 이는 대체로 소련과의 갈등관계로 인해 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이념의 쇠퇴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애국교육”을 시작했

다. 1993년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캠페인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했다.<sup>157</sup>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민족주의를 새롭게 강조하기 위해 국민당을 상대로 한 승리보다는 일제의 침략을 물리친 내용을 전면화했다. 대만통일에 대한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발견과 일본과의 관계악화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캠페인은 책, 잡지, 영화, TV 쇼, 그리고 최근에는 비디오게임까지 포함한다.<sup>158</sup> 중국의 박물관은 이러한 흐름의 중심부를 차지한다.

중국정부가 박물관건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 또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다렌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의 대표이며 중국 민족주의를 연구했던 제임스 랠리는 “역사 활동가”들이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sup>159</sup> 이전에는 금기시되었던 논의를 개시하면서 많은 학자와 박물관 큐레이터, 활동가들이 “항일전쟁”에서 중국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기념하는 대의를 지지했다. 이러한 개인활동가들은 정부에게 딜레마로서 작용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일본과의 분쟁에서 도덕적 근거를 주장하기 위해 역사문제를 사용하는 한편 관계가 우호적으로 돌아설 때에는 그 마개를 닫려고 한다. 개개인은 도덕적 엄숙함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으면서 그들이 당의 노선에 비교적 가까이 밀착되어 있으면 그들의 활동을 억제하기는 어려워진다. “중국공산당은 일본에 대한 저항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강조했는데 중국사람들이 그것을

<sup>157</sup> “Program for China’s Education Reform and Development,” the State Education Commission, January 1993.

<sup>158</sup> PowerNet Technology and the Chinese Communist Youth League (CCYL) developed a game entitled, “Anti-Japan War Game Online.” The game simulates Japan’s invasion in 1937, however the players can only play the Chinese side. The CCYL dubbed the game interesting and instructive. It is scheduled to be released at the end of 2005. Xinhua, 31 August, 2005.

<sup>159</sup> James Reilly, “China’s History Activists and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Asian Survey*, Vol. XLIV, No. 2 (March/April 2004), pp. 276-294.

<sup>156</sup> 조호제(성공회대 교수)와의 인터뷰, 2005년 11월 28일.

기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이상할 것이다”라고 렐리는 말했다.<sup>160</sup>

정부지원을 받는 가장 큰 박물관은 전쟁의 주요 사건을 기념한다: 난징에 있는 난징 대학살 박물관, 베이징에 위치한 마르코 폴로 다리 박물관, 그리고 선양에 있는 9월 18일 박물관 등은 일본이 만주를 정복하는데까지의 사건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러 개의 작은 박물관들은 개인과 지역관리들의 협력을 통해 건립되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박물관들은 하얼빈의 제 731 박물관과 같이 그 지역의 중대한 사건에 중점을 둔다. 상하이지역의 학자는 위안부 주둔지를 재건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였고 방문객들을 위한 가이드여행을 준비하고 있다.<sup>161</sup> 중국에서 가장 큰 사설 박물관은 2005년 8월 15일 청두 인근에서 개관한 항일전쟁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판짜안 추안과 전 군인, 지역관리, 부동산 개발자들이 수년간에 걸쳐 모은 막대한 전쟁유물을 전시하고 있다.<sup>162</sup>

중국에 대한 일본의 잔학 행위가 주제인 경우 난징 대학살은 언제나 첫번째로 전시된다. 그 도시의 모든 주민은 대학살에 대해 알고 있으며 16살 이상의 모든 중국인들이 학교에서 이에 대해 배운다.<sup>163</sup>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의 공식집계로는 사망자가 400,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와 관계없이 일본 군대가 중국의 전시 수도에 진입했을 때 보여 주었던 잔학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난징 대학살이 일반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야기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박물관은 고상한 기념과 선동적인 선전사이의 미세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잔학성을 보여주는 사진은 상대적으로 적게 전시되었으며 전술적으로 다뤄진다. 국제안전지대를 다루는 곳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가장 저명한 외국인들의 프로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또한 박물관의 상당한 공간은 난징 대학살에 대한 일본 정치인의 사죄를 논의하는데 할당되고 있다. 한 중국 방문객은 박물관을 둘러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때로는 용서받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나도 상대방이 한 일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한다.”<sup>164</sup>

난징 박물관이 다소 절제된 전시를 한 반면 다른 박물관은 소름끼치는 선정주의를 보여준다. 2005년 8월 20일 동안 베이징에서 전시되었던 대학살에 대한 특별전시는 주로 일본이 자행한 만행에 대한 자세한 증언으로 구성되었다. 학살장면을 보여주는 피투성이의 사진이 많이 전시되었다. 하얼빈의 제 731 박물관에서는 일본인들의 생체 실험에 관한 메시지가 벽면의 설명뿐이 아니라 일본인이 감염시킨 장티푸스에 걸린 마을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를 담은 확성기를 통해서도 전달된다.<sup>165</sup>

<sup>160</sup> Crisis Group interview by phone, James Reilly,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11 December 2005.

<sup>161</sup> Crisis Group interview, James Reilly, AFSC, 11 December 2005.

<sup>162</sup> “Joint Efforts to Tell the Truth”, *People's Liberation Army Daily*, 8 July 2004. See also Benjamin Kang Lim, “Chinese Communists Reassess World War Two Victory”, Reuters, 14 July 2005.

<sup>163</sup> Crisis Group interview, Chinese journalist, Nanjing, 3 September 2005.

<sup>164</sup> Crisis Group interview, Nanjing, 3 September 2005.

<sup>165</sup> Ian Buruma, “The Rest is History”, *Financial Times*, 22 January, 2005.

#### IV. 일본의 과거사 사죄 문제

동북아시아의 주요 갈등 가운데 하나는 일본이 과거의 행태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졌느냐의 문제이다. 간혹 일본이 과거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1970년대 이후 2명의 천황과 10명의 총리, 그리고 여러 명의 장관들은 일본의 이웃국가들에 대한 자신의 과거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다나카, 미야자와, 나카소네 등 총리들과 히로히토 천황은 사과를 했는데 이들은 “유감”과 “가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진실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82년 8월 24일 스즈키 젠코 총리는 일본은 “(과거 주변국에 점령을) 침공이라고 비난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up>166</sup> 1984년 9월 6일 히로히토 천황이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20세기에 양국 사이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는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sup>167</sup>

1990년대 들어 일본의 사죄는 좀더 포괄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사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도 나타난다.<sup>168</sup> 가장 포괄적인 사죄는 종전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에 사회당 소속의 무라야마 토미치 총리에 의해 이뤄졌는데 무라야마 담화로 불리는 발언은 아래와 같다.

멀지 않은 과거의 특정시기에 일본은 식민지배와 침략행위를 통해 많은 국가들의 국민들, 특히 아시아국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 미래에 또다시 그런 실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인간애의 정신에 입각해 그러한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깊은 자책감을 표하면서 통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sup>169</sup>

뒤이어 일본의 관료들의 무라야마 담화를 반복해서 말했다. 다나카 마키코 외상은 2001년 9월 8일에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의 사죄를 재확인 한다고 말했다고 고이즈미 총리는 2005년 60주년 행사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거의 그대로 반복했다.<sup>170</sup>

1993년 8월 4일에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최초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이는 “당시 군당국의 관여”를 인정하면서 위안부에게 일본정부의 “진솔한 사죄와 유감”을 표현했을 때를 의미한다.<sup>171</sup> 1995년 이후 모든 일본 총리는 위안부에게 보내는 사과의 편지에 서명을 했다. 그 이외의 행위 예를 들어 난징 대학살이나 731 부대의 생체 실험 등의 구체적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에는 11번, 중국에는 3번, 북한에는 1번 사과를 했는데 나머지는 주로 “아시아 국민들”이나 “주변국가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죄를 했다. 사죄라는 말은 나라마다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한국에 경우에는 주로 특정한 문제들,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한국인으로 하여금 일본 말을 쓰도록 강제한 것등에 대해 언급되온 반면

<sup>166</sup> Cited in Tahara Soichiro, *Japan's War* (Tokyo, 2001), p. 161 (in Japanese).

<sup>167</sup> *Time*, 17 September 1984.

<sup>168</sup> It is worth noting that Japanese do not generally use the phrase “I am sorry” (mousiwakegozaimasen) in formal situations.

<sup>169</sup> The text of Murayama's apology is available at <http://www.mofa.go.jp/announce/press/pm/murayama/9508.html>.

<sup>170</sup> Text available at <http://www.mofa.go.jp/announce/announce/2005/8/0815.html>.

<sup>171</sup> Statement by the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on the result of the study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http://www.mofa.go.jp/policy/women/fund/state9308.html>.

에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 즉 “고통”과 “침략”에 대한 사죄의 뜻을 담고 있다.

일본의 언행에 대한 비판자들은 일본의 사죄 표현 뿐만 아니라 일본지도자들의 행동과 모순되는 발언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행들은 일본의 사죄를 가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있다.<sup>172</sup>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위기감시기구의 조사를 보면 약 95%가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73</sup> 아키히토 천황이 사이판 전투 기념일에 사이판을 방문했을 때 예정에 없던 한국인 희생자의 추모시설에 참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아키히토의 참배를 환영하기보다도 그가 사진을 찍거나 화환을 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했다. 그가 조용히 묵례를 하는 모습은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바라샤바 케토의 추모시설에 무릎을 꿇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한국인들에게 결코 우호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이다.<sup>174</sup> 또한 아키히토가 그의 아버지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되었다.<sup>175</sup>

일본의 사과가 자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은 일본 내부의 반발로 이어져 저명한 고위관리들의 망언을 낳기도 한다.<sup>176</sup> 이는 다시 일본이 진정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문을 낳는다. 이와 관련해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신혜수 대표는 “일본

의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이다. 그들의 사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곤 한다”고 말했다.<sup>177</sup> 심지어 일본내부에서조차도 사과와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민주당 소속의 고바야시 치요미는 “고이즈미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면 그의 사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sup>178</sup> 사회주의자인 무라야마가 명확한 사죄를 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자민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사가 일제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고위관료를 지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인을 강제노동자로 고용했던 아소 타로 외상이 일본인은 “깊은 유감의 뜻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sup>179</sup>

또 한가지 비판의 초점은 일본이 전쟁범죄에 의한 개인피해자들에게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찌의 범죄행위로 인한 개인피해자들에게 580억 유로를 지불했던 독일과는 달리<sup>180</sup> 일본은 모든 보상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과 1972년 중일수교때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침략을 당한 나라들에게 수십억달러의 차관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언론인은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보상책임을 포함시키지 않은 협정을 한국이 수용했기 때문에 개인희생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sup>181</sup> 간혹 일본의 하등법원이 개인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판결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러한 판결은 고등법원에

<sup>172</sup> Taeju Kim,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Apolog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hicago, 2004.

<sup>173</sup> Crisis Group survey conducted 26 September 2005 at Yonsei and Ehwa Woman’s University campuses.

<sup>174</sup> 중앙일보, 2005년 6월 29일.

<sup>175</sup> 동아일보, 2005년 6월 28일.

<sup>176</sup> Jennifer M. Lind,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4. Crisis Group interview, Abe Tomoko, Japan House of Representatives, 28 June 2005.

<sup>177</sup> 신혜수(정대협)와의 인터뷰, 서울, 2005년 9월 30일.

<sup>178</sup> Crisis Group interview, Tokyo, 25 July 2005.

<sup>179</sup> James Brooke, “Remorse from Japan in Face of Isolatio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8 December 2005.

<sup>180</sup> [http://www.germany-info.org/relaunch/info/archives/background/ns\\_crimes.html](http://www.germany-info.org/relaunch/info/archives/background/ns_crimes.html). 기금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제공된다.

<sup>181</sup> Crisis Group interview, Tokyo, 9 November 2005.

서 뒤집어져왔다. 이와 관련해 브래트 글로서만은 “일본의 문화가 서양보다 법을 덜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본이 보상책임이 없다는 법적인 설명은 도덕적설명보다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한다.<sup>182</sup>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은 전후 처리의 모범사례로 간주되어왔다. 브란트의가 바르샤바 추모시설에서 보여준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일은 일본과는 달리 독일 사회전체의 책임을 수용했다는 점에 있다.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아우슈비츠 해방 60주년 기념연설에서 “오늘날의 독일인의 압도적인 다수는 홀로코스트에 대해 유죄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인은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나찌이념은 독일인에 의해 고무되었고 독일인에 의해 행동에 옮겨졌다”고 강조했다.<sup>183</sup>

과거사문제에 대한 한국의 끊임없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한국인들은 일본의 재침가능성을 낮게 보고있다. 한 미국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일본의 역사청산과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미일동맹이 일본의 재침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sup>184</sup> 다양한 인생을 경험한 한국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인식의 경향이 드러난다. 정부위원회에서 독도문제연구를 이끌고 있는 김병렬은 “현재 일본은 제국주의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미일동맹이 해소되면 일본은 다시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85</sup> 독립기념관에서 일본의 만행에 대한 해설자로 일하고 있는 25세의 가이드는 일본의 재침에 대해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고 말했다.<sup>18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한 전직 국회의원은 “우리는 당신보다 일본을 훨씬 잘 안다. 그들이 다시 우리를 침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sup>187</sup>

중국에서는 과거사문제 및 일본의 재침 가능성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중일 양국 학자와 NGO의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63%는 일본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88</sup> 난징 대학살 박물관을 찾은 한 방문객은 “미래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이 이러한 만행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89</sup> 한 반일웹사이트에 올라온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인은 극소수인 반면에 영토 확장의 야욕을 갖고 있는 일본인은 다수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일본정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어떻게 난징 대학살을 부인할 수 있는가?”<sup>190</sup> 중국인의 공통된 토론주제는 일본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191</sup> 한 중국인 국제정치전문가는 중국은 일본에 대해 군사적 재무장과 경제력의 약화라는 이중적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반일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인은 일본에 대해 새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일본은 중오의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나쁜 일본에 대해 중국은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92</sup>

일본인은 과거사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보고 있다. 1998년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sup>182</sup> Crisis Group interview by email, 8 December 2005.

<sup>183</sup> “Schroeder admits ordinary Germans' role”, *The Age*, 27 January 2005.

<sup>184</sup> Lind, “Sorry States”, op. cit.

<sup>185</sup> 김병렬과의 인터뷰, 2005년 8월 24일.

<sup>186</sup> Crisis Group interview, Chonan, 7 September 2005.

<sup>187</sup> 인터뷰, 서울 2005년 6월 23일.

<sup>188</sup> “Nearly 63% Chinese Feel Bad about Japan: Poll”, Xinhua, 24 August 2005 (in Chinese).

<sup>189</sup> Crisis Group interview, Nanjing, 3 September 2005.

<sup>190</sup> <http://www.china918.net/en/wfr/wfr03.htm>,

<sup>191</sup> Crisis Group interviews, Beijing, 28 August 2005, Nanjing, 3 September 2005.

<sup>192</sup> Crisis Group interview, Beijing, 26 August 2005.



방문했을 때 그는 한국은 일본의 과거를 용서하고 일본의 평화적발전에 대해 칭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의 논설위원인 후나바시 요이치는 “이것은 일본지도자와 대중들 사이에서 대단한 반향을 가져왔다”고 말했다.<sup>193</sup> 김 대통령은 또한 일본 문화상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했고 양 국사이의 음악교류의 문도 열었다. 이른바 가요와 드라마로 만들어진 “한류”사업은 일본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고 한국의 어린이들은 일본의 만화와 비디오게임에 심취해 있다.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항의집회에 참석하는 한국의 중학생들은 일본이 결코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핵심적인 이미지는 군사주의에 있지 않고 디기몬, 토로토, 세일러 문 등 일본만화라고 말했다.<sup>194</sup> 반면에 일본인들은 중국이 일본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중국의 공산지배가 계속 되는 한 그럴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sup>195</sup>

일본이 위안부문제 등 개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등 과거청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를 통해 이웃국가들의 비판을 줄이고 관계개선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가간의 화해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는 독일이 사죄와 보상을 본격화하기 전부터 시작했는데 이는 유럽통합을 발전시키는 것이 상호간의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이다.<sup>196</sup> 동북아의 문제는 유럽과 같은 수준의 상호이익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안보 우산에 있지만 이들 두

나라는 점차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지역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나라는 또한 북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포용과 화해를 강조하는 반면에 일본은 대결적인 미국의 정책에 더 근접해 있다.<sup>197</sup>

<sup>193</sup> Crisis Group interview by email, 2 December 2005.

<sup>194</sup> 인터뷰, 서울, 2005년 9월 14일.

<sup>195</sup> Crisis Group interview by email, Funabashi Yoichi, 2 December 2005.

<sup>196</sup> Lind, “Apologies and Threat Reduction”, op. cit.

<sup>197</sup> For South Korea’s approach to North Korea, see Crisis Group Report, *How the South Views its Brother from Another Planet*, op. cit. For Japan and North Korea, see Crisis Group Report, *Japan and North Korea*, op. cit.

## V. 부상하는 민족주의

이렇듯 동북아에서 국가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데에는 민족주의의 부상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최근 몇십년 사이에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민족주의가 공산주의를 대신해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는데 접착제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과거 권위주의에 대한 재평가를 낳고 있다. 이 사이에 일본에서는 동북아의 지도적위치가 흔들리면서 우경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들 모두의 경우는 국내정치가 민족주의감정을 자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세 나라의 국민들을 설득해 민족주의를 멀리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보다 협력적이고 우호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 A. 중국

불과 한 세대만에 이뤄진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이 나라를 빈국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만들었다. 경제성장은 인구의 상당부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1당 지배의 타당성에 대한 불만도 키워왔다. 중국 정부는 이념의 호소력이 약해지자 민족주의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수세기에 걸친 식민지배를 딛고 중국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에게 있어서 국가의 위대함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전쟁”에서의 승리였다. 일본의 패배는 중국의 오랜 침체를 끝냈고 중국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토를 뒤찾게 하는데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티벳, 홍콩, 타이완을 자신의 영토로 간주해왔다. 이러한 경험은 일본 패망 60주년 행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항일전쟁의 승리를 다룬 영화가 지난 1년동안 무려 60편이 제작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sup>198</sup> 영화의 주제는 대개 약하고 분열된 중국은 식민지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강하고 단합된 중국은 어떤 적과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적은 어떤 특정 국가도, 심지어 제국주의 그 자체도 아닌 분열인 것으로 묘사된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인 까오 광추안이 2005년 8월 1일 발표한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중국인민들이 수행한 항일전쟁은 중국 공산당이 중추적 역할을 한 전국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공산당이 전체 민족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국주의는 중국민족의 영원한 정신적보물로 남을 것이고 인민전쟁은 적을 격퇴하고 승전을 보장하는 마술과도 같은 무기였다. 그리고 강력한 국방력은 나라의 주권과 안전과 영토의 통합을 보장하는 신뢰할 수 있는 보장책이다.<sup>199</sup>

대중적인 수준에서 친중파와 반일파의 구분은 쉽게 희미해지곤 한다. 최근 많은 사건들은 중국인들의 뿌리깊은 반일감정을 잘 보여주었다. 일례로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과 일본의 축구경기는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인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중국청년일보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99%는 항일전쟁을 결코

<sup>198</sup> Yoichi Funabashi, “China’s New Thinking on North Korean Policy?”,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2 July 2005.

<sup>199</sup> “Patriotism is Spiritual Treasure of Chinese Nation: Minister”, *People’s Daily*, 2 August 2005.

잇을 수 없고 과반수 이상은 일본이 반성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sup>200</sup>

중국인의 반일감정이 폭발하자 중국정부가 시위를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내지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확실히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방문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은 언론을 통해 대중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동시에 중국정부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중국정부로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있다. 반일웹사이트에 한 기고문은 이러한 잠재력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다른 나라에게 중국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때마다 나는 화가 난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부패를 일소하는 등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중국을 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달라는데 5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공산당이 못한다면 그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하자!<sup>201</sup>

중국 정부는 시위를 제한하기 시작했고 인터넷을 검열하고 문제의 메시지가 실린 웹사이트를 폐쇄했다.<sup>202</sup> 그러나 전체인구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휴대폰과 인터넷의 신속한 확산은 저항의 속도가 중국정부가 통제하는 속도를 넘어서게 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sup>203</sup>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반일감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만 점차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민일보의 칼럼리스트이자 베스트 셀러인 '엇갈린 칼'(Crossed Swords)-경제개혁에 대한 당내 논쟁을 다룬 책-의 공동 저자인 마리 청은 반일감정이 중국의 긴박한 내부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힘을 분산시키고 외부의 "중국위협론"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중국의 민족주의가 도쿄 도지사인 이시하라 신타로와 같은 우익인사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일본의 사과와 개발원조를 받아들이고 더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sup>204</sup> 인민대학의 미국학연구소 소장인 쓰인홍도 일본의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마리청과 흡사한 주장을 폈다.<sup>205</sup> 마리청과 쓰인홍등의 지식인들은 간혹 배신자라고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중국이 토론의 자유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B. 한국

한국은 1987년 민주화이후 심대한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해왔다.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세대는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한 세대와 교체되었다.<sup>206</sup> 이러한 심대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접근부터 한국 현대사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의문을 가져왔다. 냉전시대에 북한은 정당성의 근거로 지도부의 항일투쟁을 강조했던 반면에 한국은 일제시대의 부역문제를 덮고 경제발전을 체제

<sup>200</sup> "Japan Invasion Stays Fresh in Chinese Despite Time", Xinhua, Beijing, 16 August 2005 (in Chinese).

<sup>201</sup> <http://www.china918.net>.

<sup>202</sup> Anti-Japanese websites that remain accessible include [www.1931-9-18.org](http://www.1931-9-18.org) and <http://www.aichina.cn>.

<sup>203</sup> Edward Cody, "China Grows More Wary over Rash of Protests", *The Washington Post*, 10 August 2005, p. A11.

<sup>204</sup> Ma Licheng, "New Thinking on Sino-Japanese Relations", *Japan Echo*, vol. 30, Issue 3, pp. 35-40.

<sup>205</sup> "Chinese Intellectuals Call for Change in Japan Policy", *Jiji Press English News Service*, Tokyo, 5 April 2005, p. 1.

<sup>206</sup> See Crisis Group Report, *How the South Views its Brother from Another Planet*, op. cit.

의 자부심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회의 주축이 되면서 이들은 보다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자주 사용했던 “과거사 청산”은 2005년에 힘을 얻게 되는데 이는 2005년이 일본의 식민통치가 시작된지 100주년이고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군사독재시대에 감옥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새로운 지도자 그룹은 한국의 현대사를 재평가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의 친일파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의 주요 언론사의 창업자와 일제시대에 장교로 근무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세 개의 주요 언론사와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정부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거사청산’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표적인 진보매체인 한겨레신문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파의 명단을 발표했을 때 3개의 면에 걸쳐 이를 보도하는등 친일파문제를 부각시켜왔다.<sup>207</sup> 2004년에 국회는 “일제강점기 친일활동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2005년 8월 15일 광복 60주년 기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친일파문제를 다시 강조하면서 국회에 친일파후손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sup>208</sup>

노대통령이 전통적인 지배엘리트에 대해 민족주의적인 자격에 의문을 나타내는 데에는 그가 비주류 출신이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고학을 통해 인권 변호사로 성장한 노대통령은 한국 사회주류를 이

뤄온 인맥과 학연을 갖고 있지않다. 일부 비판자들은 노대통령이 자신의 낮은 지지도를 만회하고자 역사문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2005년 11월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안정의 중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역사 바로잡기 보다 중요하다고 답변한 사람보다 약 4배가 많았다.<sup>209</sup>

식민지시대의 역사에 대한 재평가의 동기가 주로 국내적으로 나왔지만 이는 불가피하게 반일감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을 이슈화하는 것은 비단 현정부뿐만은 아니다. 이전 정부도 민족주의자로서의 자격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독도문제를 이용했다.<sup>210</sup> 일례로 독립기념관은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이 정점에 달했을 때 건립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과거사청산분위기는 과거 지도자들에 대한 민족주의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친일, 혹은 반일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인식보다는 한국 사회구조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이에 따른 “남남갈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청산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서 문화와 관광교류가 정점에 달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양국 사이의 과거청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스럽게 일깨워주고 있다.

최근 일본대사관앞 시위가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일관계를 살피온 마이니치신문의 사와다 가쓰미는 한국의 반일감정은 실제로는 줄어들고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반일시위자들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의 경제격차가 줄어들면서 한국인들은 더이상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고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실제로 한국인의 마음속에 존재하지않고

<sup>207</sup> 한겨레, 2005년 9월 3일.

<sup>208</sup> “Address on the 60<sup>th</sup>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15 August 2005, available at [http://english.president.go.kr/warp/app/en\\_speeches/list?group\\_id=en\\_archive&meta\\_id=en\\_speeches](http://english.president.go.kr/warp/app/en_speeches/list?group_id=en_archive&meta_id=en_speeches).

<sup>209</sup> 중앙일보, 2005년 11월 30일.

<sup>210</sup> Crisis Group interview, Bong Young-shik, Williams College, Seoul, 31 August 2005.

반일감정도 실제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sup>211</sup>

### C. 일본

일본은 항상 외국인 혐오적인 민족주의를 공유해왔다. 메이지와 쇼와시대는 물론이고 1920년대 “다이쇼 민주주의”가 잠깐 번창한 때에도 정부관리들은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암살위험에 노출되곤 했다.<sup>212</sup> 전후 일본에서는 구호를 외치는 학생차량이 도로에 등장하곤 했지만 광신도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극단적인 극우민족주의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경화되어왔다. 한국과 중국을 공격하는 만화책과 “한류를 증오한다”는 제목을 가진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sup>213</sup> 한국을 반대하는 만화책 가운데에는 “우리가 진정 조선에서 한 일은 조선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다”는 식으로 과거식민통치를 정당화하려는 것들도 있다.<sup>214</sup>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구학적 변동에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인데 2005년에는 사망률이 출생률을 능가하기도 했다. 이는 일본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좋아질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10여년간의 경제침체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동시에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시험발사는 동북아지역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위험하고 국제제도는 일본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본인들의 인식을 강화시켰다.<sup>215</sup> 냉전의 종식과 일본 사회당의 쇠퇴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권내 좌파들의 몰락을 가져왔다.<sup>216</sup>

일본의 우경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개 “보통국가”라고 언급되면서 추진되어온 군사력 강화이다.<sup>217</sup> 이와 관련해 스즈오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나카모토 요시히코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변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평화유지를 위해 이라크와 캄보디아와 동티모르에 파병하는 것이 재무장이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난센스이다. 파병된 자위대가 하는 일은 물을 나르는 정도”라고 말했다.<sup>218</sup> 집권 자민당은 2005년 10월 28일에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구절이 들어간 헌법 9조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sup>219</sup> 일본은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진출에 성공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2005년에 좌절되자 유엔분담금을 축소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sup>220</sup>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교과서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불만”과 중국의 “괴롭힘”은 일본의 반발을 고조시키고 있다. 종도우파 경향의 도쿄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한 연구 모임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은 이후에 양국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sup>211</sup> Crisis Group interview, Sawada Katsumi, Mainichi Shimbun, Tokyo, 28 June 2005.

<sup>212</sup> Buruma, *Inventing Japan*, op. cit.

<sup>213</sup> Norimitsu Onishi, “Ugly Images of Asian Rivals Become Best Sellers in Japan”, *New York Times*, 19 November 2005.

<sup>214</sup> Yamano Sharin, *Hating the Korea Wave*, Shinyusha Mukku Publishing Co., 2005 (in Japanese).

<sup>215</sup> Crisis Group interview by email, Brad Glosserman, Pacific Forum, 8 December 2005.

<sup>216</sup> Crisis Group interview, Kurasawa Akira, Peace Depot, Tokyo, 7 November 2005.

<sup>217</sup> See Crisis Group Report, *Japan and North Korea*, op. cit.

<sup>218</sup> Crisis Group interview, Tokyo, 25 August 2005.

<sup>219</sup> Kajimoto Tetsuji, “LDP Revises Article 9 in Draft Constitution”, *Japan Times*, 29 October 2005.

<sup>220</sup> “Japan Threatens Dues Cut over UNSC Seat”, *Japan Times*, 19 October 2005.

일본은 대중정책을 상호주의적이고 비순응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sup>221</sup>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단체인 피스보트의 집행위원인 구로사와 아키라는 우경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대안적인 형태의 국가자부심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와 오키나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평화를 상징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이용해 국제공동체가 보다 평화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반일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표방식을 신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sup>222</sup>

요미우리 신문의 국제문제 논설위원인 야마모토 구니히코와 같은 일부 보수적인 인사들조차 일본의 최고 이익은 평화공존이라고 믿고 있다. 야마모토는 “일본이 다시 헤게모니를 추구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는 일본의 최고 이익이며 군국주의의 부활은 일본이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sup>223</sup> 경제계에 있는 인사들도 과거사문제에 대한 갈등이 보다 중요한 주변국과의 경제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상하이에서 만난 한 사업가는 “물론 야스쿠니 신사문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뜨거운 이슈이다. 그러나 경제차원에서 볼 때 이는 큰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sup>224</sup>

지난 9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고이즈미 총리는 보수파인 아베 신조와 타로 아소를 각각 관방장관과 외무장관에 임명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더욱

우경화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관찰자들은 외교정책의 함의에 있어서 낙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도쿄에 있는 릿쿄 대학에서 한일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이종원 교수는 아베와 타로를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은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파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고이즈미의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25</sup> 또 다른 전문가는 현 정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미 내각에 있었고 단지 자리를 바꿨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sup>226</sup> 새로운 경제산업성 장관인 니카이 토시히로는 중국과 좋은 관계에 있고 에너지자원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장담하기도 했다.<sup>227</sup>

고이즈미는 2006년말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총선승리를 고려할 때 실제로 고이즈미가 그렇게 할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는 아직 그의 발언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이즈미가 낡고 파벌에 빠져 있는 자민당을 바꾸는데 성공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자민당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228</sup> 다음 총리 역시 고이즈미가 했던 것처럼 자민당의 구조에 의존하기보다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집권 자민당의 유력한 총리 후보는 아베 신조인데 그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해온 보수적 인물이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아베가 인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이즈미의 직계 후계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자민당은 아베를 대신할 인물을 지명하려고 할 것인데 이는 아베가 권력을 잡고자 한다면 자신의

<sup>221</sup> “Policy Recommendations on Japan’s Diplomacy for China”, Tokyo Foundation, July 2005.

<sup>222</sup> Crisis Group interview, Tokyo, 7 November 2005.

<sup>223</sup> Crisis Group interview, Tokyo, 7 November 2005.

<sup>224</sup> Crisis Group interview, Shanghai, 1 September 2005.

<sup>225</sup> Lee Jong-won, “Reinforce Diplomacy with Japan”, *Joongang Daily*, 7 November 2005.

<sup>226</sup> Crisis Group interview, senior journalist, Tokyo, 9 November 2005.

<sup>227</sup> David Pilling, “Japan Softens Attitude toward China”, *Financial Times*, 7 November 2005.

<sup>228</sup> Crisis Group interviews, Tokyo, 7-9 November 2005.

성향을 온건하게 조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sup>229</sup>

주요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5년 선거이전에 당시 당대표였던 아카다 가쓰야는 아시아와의 외교를 개선하고 미일동맹에서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요지의 외교정책정강을 발표한 바 있다.<sup>230</sup> 그러나 총선패배 직후 민주당의 당대표는 마에하라 세이지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저명한 반핵운동단체인 피스데 포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대표는 “민주당의 외교정책은 아직 공고화되지 않았다”며 “만약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자민당보다는 아시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sup>231</sup>

---

<sup>229</sup> Crisis Group interview, Tokyo, 9 November 2005.

<sup>230</sup> Available at <http://www.dpj.or.jp/vision/vision-e/index.html>.

<sup>231</sup> Crisis Group interview, Yokohama, 8 November 2005.

## 한일 양국 의원들의 발언

**하쿠 신쿤, 참의원 의원 (민주당):** 일본 의회의 유일한 재일동포인 하쿠는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자신의 정치활동의 초점을 맞춰왔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하쿠는 2004년 참의원에 합류하기 전에 방송인사로 성장하는데 엄청난 차별을 극복한 인물이다. 그는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과의 긴장을 국내 정치적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전쟁기념관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한일 양국이 역사학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역사문제를 함께 연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거의 모든 일본인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유머와 문화라고 강조한다. 역사를 가지고 일본인을 자극하는 것보다 김치와 갈비로 일본인의 코를 자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일단 일본인이 한국의 문화에 호감을 갖게 되면 그들은 한국의 관점에 훨씬 개방적으로 된다고 한다.<sup>232</sup>

**고바야시 치요미, 중의원 (민주당, 홋카이도):** 고바야시는 홋카이도 북부섬에서 인권단체활동가로 일하면서 재일 한국인의 고통을 알게 되었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섬의 탄광에서 일했는데 그들 가운데 약 2만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중의원이 되자마자 그녀는 고이즈미에게 모든 조선인의 유해를 반환하고 조선인 광부의 후손에게 사죄하며 금전적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이즈미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속하는 한 사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고 있다. 그녀는 야스쿠니 문제해결책으로 A급 전범을 추모하는 것을 중단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기념관이 건설되어도 고이즈미는 계속 야스쿠니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후소사교과서를 부흥시키는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고바야시는 지난 선거에서 한일관계를 유세의 핵심의제로 삼았지만 외무장관인 마치무라에게 패배했다.<sup>233</sup>

**고바야시 유타카, 참의원(자민당):** 고바야시 유타카(고바야시 치요미와는 관계가 없음)은 오랫동안 한일관계를 다뤄왔다. 그는 2005년이 태평양 전쟁 종결 60주년이고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역사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때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는다. 즉 중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역사문제를 제기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상대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주된 요인은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의 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주변에 한일관계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켰던 것과는 다른 지도자들이 한국의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34</sup>

**아베 도모코, 중의원(사민당):** 그녀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죄방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상충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독일과는 달리 일본인 전체가 일본의 과거 행위에 대해 집단적인

<sup>232</sup> Crisis Group interview, Tokyo, 24 July 2005.

<sup>233</sup> Crisis Group interview, Tokyo, 25 July 2005.

<sup>234</sup> Crisis Group interview, Tokyo, 27 June 2005.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해 무지하고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베는 또한 일본이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sup>235</sup>

**권철현, 국회의원(한나라당-부산):** 권철현은 1980년대에 일본으로 유학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일의원연맹 사무총장으로서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고이즈미와 노무현이 대중인기 영합적인 언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는 계속 긴장상태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특히 노 대통령이 독도/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권의원은 그 섬들은 “우리의 주머니에 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과거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한국이 독도문제를 강조하기 전까지 보통의 일본사람들은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권의원은 500명이 회원으로 있는 의회그룹을 통해 한일문제를 신중히 다루고 있다며 일례로 일본 의원들은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한국보다 일본의 중앙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그는 한국의 동료의원 가운데 일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10명도 안된다고 이것은 일본 정치인들과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권의원은 한국은 외국을 침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 평화센터의 본부를 서울에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sup>236</sup>

**강창일, 국회의원(열린우리당-제주도):** 권철현과 마찬가지로 강창일은 1980년대 초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 일본의 조선합병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다. 강 의원은 본인 스스로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국회의 독도-교과서문제 특별위원회 멤버이다. 강 의원은 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고이즈미 총리는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고이즈미가 어떤 날은 한국에게 사과를 하고 어떤 날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또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이지만 이 모임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그저 술이나 마시는 모임”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일본의 자민당이 후소샤교과서를 승인하라고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것을 일본 의원들이 부인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는 중국과 일본은 헤게모니쟁투를 벌일 것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이 제3자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강 의원은 또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군사충돌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sup>237</sup>

**권선택, 국회의원(열린우리당-대전):** 권선택은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학군이 후소사의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일본신문광고게재를 위한 모금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적 감정을 반영한 것이고 미국이 한중일 관계를 푸는데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권철현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의 지역구에서 일본문제는 유권자들에게 지역경제 다음의 문제이고 정치개혁 및 남북관계를 능가하는 이슈라고 한다. 권의원은 한국에게 일본은 중국보다 훨씬 심각한 위협이고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sup>238</sup>

<sup>235</sup> Crisis Group interview, Tokyo, 28 June 2005.

<sup>236</sup> Crisis Group interview, Seoul, 22 August 2005.

<sup>237</sup> Crisis Group interview, Seoul, 16 August 2005.

<sup>238</sup> Crisis Group interview, Seoul, 22 August 2005.

## VI. 해결책

이 보고서에서 설명한 문제들이 장기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선의 접근은 신뢰구축과 제도형성 조치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국가들이 북핵 문제와 같은 보다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A. 영토 분쟁

무인도를 둘러싼 분쟁은 이들 섬에 대한 영유권이 국제법적으로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들 섬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별로 없다. 따라서 영유권을 둘러싼 양자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한 최선의 접근은 천연 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동지나해에서 분쟁의 핵심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을 둘러싼 것이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은 에너지 수요가 폭등하고 있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나서고 있다. 일본 역시 에너지 수요가 중국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끊임없이 에너지원을 탐사하고 있다. 한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중국, 일본, 대만이 기술, 자본, 노동비용 등 각자의 비교우위분야를 활용해 공동탐사에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주변국들과 이와 유사한 합의를 갖고 있다. 2003년 9월에 스포래틀리 군도의 평화적 자원개발을 촉진하는 선언에 서명했다. 2005년 3월에는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와 필리핀, 베트남이 경제적 목적을 위한 공동진동시험을 실시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sup>239</sup> 이밖에도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

웨이트, 오스트레일리아, 동티모르등과 공동으로 석유개발에 나서고 있다.<sup>240</sup> 이것은 순수한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의 참여를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영유권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영토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두번째 조치는 모든 당사자들이 섬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는 행동규약을 협상하는 것이다. 2002년에 중국과 아세안은 이와 비슷한 행동규약에 서명한 바 있다. 이 규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하며 환경보호 및 해적척결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다짐했다.<sup>241</sup> 이러한 규약에 체결된 이후 중국과 아세안 사이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새로운 규약은 동북아의 모든 나라를 포괄하는 일반협정이 될 수도 있고 동지나해와 동해/일본해에서 별도의 협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원이 풍부한 동지나해를 둘러싼 긴장완화는 독도/다케시마문제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섬 부근에는 동지나해만큼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은 2006년에 공동어업구역에 대한 관리문제에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2005년 12월부터 어업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도 했다.<sup>242</sup> 만약 한국과 일본어선이 중간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일본의 지방자치체가 영토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의심의 여지없이 독도영유권을 고

<sup>239</sup>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war/spratly.htm>.

<sup>240</sup> Crisis Group interview by email, David Fridley,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6 December 2005. For a discussion of the challenges involved in such agreements, see "Joint Development Zones and Cross-Border Unitisations", November 2003, available at [www.kendallfreeman.com](http://www.kendallfreeman.com).

<sup>241</sup>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http://www.aseansec.org/13163.htm>.

<sup>242</sup> , , 2005 12 1 .

수하려고하겠지만 일본이 이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독도문제를 쟁점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캐나다와 덴마크 사이에 한스섬을 둘러싼 갈등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의 무인도를 둘러싼 분쟁은 양자의 우려를 동등한 수준으로 해결하는데 실패해왔다는 점을 동북아국가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243</sup>

간도는 중국과 북한사이의 국경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거나 포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정부가 만주의 어떤 부분이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는 단지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이 이뤄지면 통일코리아는 현존하는 국경조약을 존중하겠다는 선언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사이에 한국정부는 국토회복을 주장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돕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 B. 역사 분쟁

역사문제와 관련해 계속 '일본 때리기'를 하는 것은 일본내 반발을 야기할 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사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높이고 자하는 시도는 다소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인 과거사청산과 보상문제에는 거의 진전이 없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사과를 인정하는데 보다 조화된 노력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일본의 개발원조에 대해 사의를 표할 필요가 있다. 일본 역시 위안부, 강제노동, 생체실험 등 전쟁범죄의 개인피해자들에게 직접보상을 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일본은 또한 전쟁시기의 역사문서를 공개함으로써 과거사문제의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해야 한다. 1996년 무라야마 총리는 일본정부내에 있는 모든 역사문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sup>244</sup> 일본도 정보자유법을 갖고 있지만 실제 거의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저명한 일본연구자는 일본의 군사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보다 미국 정보소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sup>245</sup> 역사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일본의 안보에 결코 해가 되지 않으며 전시대의 만행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역사문제를 양자관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노력도 경주되어야 한다. 일본은 최근 역사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한가지의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2005년 10월 한국의 새로운 국립박물관이 개장되기 직전에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어 있던 북관대첩비를 반환한 것이다. 이 기념비는 16세기 일본의 침략군에 맞서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sup>246</sup> 한중일 삼국의 공동역사연구는 증진되고 있고 각국 정부와 민간 재단은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sup>247</sup> 이와 흡사하게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질릭 부장관은 일본을 패퇴시키는데 미국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는 중국의 인식을 바로잡고자 미국, 일본,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sup>248</sup> 동북아 국가들은 각자의 교과서를 발간하는 것과 별도로 역사공동연

<sup>244</sup> Mizuno Naoki, "The Importance of Sharing Historical Material", *Sekai*, July 2005, pp. 116-123 (in Japanese).

<sup>245</sup> Crisis Group interview, Umebayashi Hiroshi, Yokohama, 8 November 2005.

<sup>246</sup> 중앙일보, 2005년 10월 21일.

<sup>247</sup> 한국 정부 관리와의 인터뷰, 서울, 2005년 12월 5일.

<sup>248</sup> Robert Zoellick,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to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21 September 2005, at <http://www.state.gov/s/d/rem/53682.htm>.

구위원회는 교과서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독일의 국제교과서 연구를 수행해온 조지에케르트 연구소는 이러한 작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동북아의 교과서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sup>249</sup> 역사에 대한 해석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학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역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공동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동아시아평화연구소의 창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삼국정부가 균등하게 재정을 분담하고 정부관리가 2-3년동안 근무하고 민간 연구자들도 수개월부터 수년동안 상근 연구를 하는 방식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소는 정부간에 비공식 대화(트랙-2)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 프로젝트와 회의, 그리고 일반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의 정보센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소의 총책임자는 한중일 삼국이 돌아가면서 맡고 도서관과 상근연구인력을 갖추는 것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전쟁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새로운 전쟁기념관을 건설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워싱턴에 있는 베트남 전쟁기념관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이 기념관은 전쟁이 왜 벌어지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쳐두고 희생군인의 넋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를 인용하면서 도쿄 중심부의 신주쿠 국립공원에 옥외기념비를 세우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sup>250</sup> 이렇게 되면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방문을 포기할 필요가 없고 중국인 괴롭히기도 봉합할 수 있을 것이다. 고이즈미가 야스쿠니

방문을 중단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한 언론인은 “이 문제에 대한 고이즈미의 우둔함의 장점은 다음 총리가 야스쿠니 방문을 중단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했다.<sup>251</sup> 한중일 세 나라는 또한 역사학자들의 협력에 따라 역사 전시의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키기 위해 박물관 큐레이터간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C. 신뢰구축 조치

동북아에서 신뢰와 대화의 부족은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군사개발에 대한 양측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서로의 의도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양자간, 다자간 트랙-2 와 트랙 1.5 회의를 늘리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sup>252</sup>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관료들이 참석해 자신의 개인적 관점에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틀을 갖추는 일이다.

군사교류 또한 신뢰구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중국은 군사예산과 관련해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주변국의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2005년에 GDP의 1.5%인 299억 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외국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식적인 군사비 산출방식이 인민해방군의 예산이외의 수입원을 비롯해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이 누락되어 있다고 믿고있다. 참고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은 중국의 실제 군사비는 공식 발표치의 약

<sup>249</sup> <http://www.gei.de/english/index1.shtml>.

<sup>250</sup> See also “Govt Must Expedite New War Memorial”, *Yomiuri Shimbun*, 4 June 2005 (in Japanese).

<sup>251</sup> Crisis Group interview, Tokyo, 9 November 2005.

<sup>252</sup> 트랙-2 대화는 비정부 인사들 사이의 대화를 의미하고, 트랙-1.5는 비정부 인사와 정부 관리들이 참여하는 대화를 뜻한다.

세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53</sup> 중국과 일본은 중국에게 군사예산의 투명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sup>254</sup> 몬테레이연구소의 비확산센터에서 중국군사문제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위안진 등은 중국이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군사력에 있어서 자신감의 부족을 은폐하고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고자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한다.<sup>255</sup>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에서 참석한 한 비공식 대화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너무 좁은 범위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비군사분야의 협력을 포함한 상호재확신조치(Mutual Reassurance Measures: MRMs)를 제안했다.<sup>256</sup> 에너지 안보, 환경보호, 재난구조 등은 앞으로 갈수록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인 반면에 개별 국가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덜 민감한 분야에 서 협력하는 것은 단기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중장기에 걸쳐 대화와 정보 교류를 증대하는 것은 오산과 오인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다. 현재 이러한 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 군사력의 폐쇄적인 성격에 있다. 젊은 장교들사이의 정기적인 대화와 훈련프로그램은 중국의 미래의 군사지도자들을 보다 개방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통해 소련을 포용한 경험은 동북아에서도 적용가능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의 군사구축훈련을 통해 이러

한 방법에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sup>257</sup> 이러한 군사교류의 증대는 중국이 동북아에서 미국 군사력과 대등해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에게도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다.<sup>258</sup>

일본은 플루토늄을 축적하는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재무장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정치적으로 일본이 핵무장으로 나갈 가능성은 낮지만<sup>259</sup> 플루토늄을 계속 축적하는 것은 일본이 단시간내에 다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참고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4kg 정도인 반면에 일본은 약 45 톤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당초 원자로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후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지만 이는 실용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입증되었다.<sup>260</sup> 만약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일본은 비핵국가 가운데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재처리시설을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도발적이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일본은 “보통국가”가 되려는 일본의 의도에 대해 주변국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에 일본은 사용후 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동북아 차원의 핵폐기장 건설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 D. 제도 구축

동북아는 유의미한 지역 제도가 부족하다.<sup>261</sup> NATO, OSCE, 유럽연합 등이 있는 유럽과는 달

<sup>253</sup> Information from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hina/budget.htm>. See also U.S. Department of Defence, “Annual Report to Congress: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5”, available at <http://www.defenselink.mil/news/Jul2005/d20050719china.pdf>.

<sup>254</sup> “Japan Defence Minister Calls for Transparent Chinese Military Budget”, Agence France-Presse, 27 June 2005; Donna Miles, “Rumsfeld Urges More Transparency from Chinese Military”,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20 October 2005.

<sup>255</sup> Crisis Group interview by email, 2 December 2005.

<sup>256</sup> Information from <http://www.wiredforpeace.org/about.php>.

<sup>257</sup> Crisis Group interview by email, Jing-dong Yuan, 2 December 2005.

<sup>258</sup> John Feffer, “Grave Threats and Grand Bargains: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 Order in East Asi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Directions for Korea’s Foreign Policy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Seoul, 22 July 2005.

<sup>259</sup> Crisis Group Report, *Japan and North Korea*, op. cit.

<sup>260</sup> Frank Barnaby and Shaun Burnie, “Thinking the Unthinkable: Japanese Nuclear Power and Proliferation in East Asia”, Oxford Research Group, August 2005, <http://www.oxfordresearchgroup.org.uk/publications/briefings/Japanreport.htm>.

<sup>261</sup> Acharya,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op. cit.

리 동북아의 다자간 기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뿐이다. 그나마 ARF는 동북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지나해의 행동규약의 발전 등 동북아와 동남아의 대화를 촉진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APEC은 경제협의를 위한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포럼이다. 이들은 각기 유용성을 갖고 있지만 회원국의 폭이 넓고 합의제로 운영하는 방식은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동북아에는 이 지역내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춰 양자관계의 차이를 좁히고 폭넓은 다자간 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1993년부터 매년 회의를 갖고 있는 동북아안보대화(NACD)를 비롯해 몇몇 트랙-2, 트랙-1.5 대화 가 열리고 있다. NACD는 각국 정부에서 5명의 대표단을 참석시키는데 대표단은 대개 외교, 국방 관리와 장교, 그리고 두 개의 싱크탱크나 대학연구 자들로 구성된다.<sup>262</sup> 아태안보협력회의(CSCAP)는 아태지역의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트랙-2 회의로 동북아안보문제에 대한 스터디그룹을 갖고 있다.<sup>263</sup> 그러나 이 그룹은 한반도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에 폭넓은 기초가 될 수 있는 개별적, 병렬적 그룹이 발전한다면 매우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대화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정부와의 직접접촉을 통한 정책결정파워가 부족하다. 정부간 협력에서 하나의 진지한 노력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국경에 있는 두만강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가하고 있다.<sup>264</sup> 그러나 북핵갈등과 당사국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동북아지역의 제도구축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을 다자간제도에 완전히 참여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북아국가들이 북한의 번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한된 상호 관심사를 다룰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야 한다. 자주 거론되는 유럽통합은 프랑스와 독일이 석탄과 철강을 공유하는 양자간의 합의로 출발했다. 에너지문제는 동북아협력의 필요성이 무르익고 있는 한 분야이다. 만약 개별 국가들이 계속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에너지수요는 많고 자원은 부족한 동북아의 충돌은 불가피해진다. 이에 반해 에너지에 대한 협력적 접근은 모두의 에너지 안보를 달성케 하는데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sup>265</sup> 지역 기구는 자원 개발, 에너지 교역, 안전한 공급, 핵폐기물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 잠재적인 협력 분야는 동북아지역의 재난관리가 될 수 있는데 지구기후변화에 영향으로 인해 이 문제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6자회담 프로세스가 성공한다면 이 회의를 동북아안보대화로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해야 미래의 일이고 많은 불확실성도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 세 나라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즉 북핵 문제의 해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진전을 거둘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들 세 나라와 미국, 러시아로 구성되는 "G-5" 대화를 열어 북한의 의사진행방해와 관계없이 지역의 안보우려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sup>262</sup> <http://www.wiredforpeace.org/about.php>.

<sup>263</sup> <http://www.cscap.org/>.

<sup>264</sup> <http://www.tumenprogramme.org/>.

<sup>265</sup> The Nautilus Institute has conducted several workshops on this issue: <http://www.nautilus.org/energy/2005/beijing/workshop/index.html>.

일본은 확실히 주변국의 민감성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과 중국도 일본의 국내정치적 미묘한 차이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와 일본의 미래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토론을 구부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변화에 대한 일본인의 열망을 “극우 민족주의”나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는 식으로 뭉뚱그리게 되면 한국인과 중국인은 일본의 반발을 초래하고 온건한 보수주의자들을 우익의 편으로 밀어넣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모두가 극단적인 수사를 피하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서울/브뤼셀, 2005년 12월 15일

APPENDIX A

영토 분쟁

